

한반도 포커스
FOCUS ON KOREAN PENINSULA
2023-05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이영훈
최은주
최장호
김두환
김일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반도포커스
2023-05



FOCUS ON KOREAN PENINSULA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이영훈
최은주
최장호
김두환
김일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반도포커스 2023-05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인 쇄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발 행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발행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 소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전 화 02-3700-0700

팩 스 02-3700-0707

인쇄처 (주)늘품플러스(070-7090-1177)

정 가 비매품

ISBN 978-89-8421-566-5 93300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반도포커스 2023-05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목 차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	1
이영훈 동국대 DMZ평화센터장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과 경제법 정비 동향	13
최은주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	31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47
김두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65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

이영훈

동국대 DMZ평화센터장



I. 북한 경제 변화의 새로운 변수, 국제질서 변화

북한의 경제사정은 대북제재, 코로나, 자연재해 등의 3중고로 인해 2017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진 2021년 4월에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¹

그러나 코로나의 충격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8월 10일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고 정상방역체제로 전환했다.² 또한 4월에는 북한 국경 지역 세관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교역 및 육로 통행 재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³ 한편 자연재해는 농업 등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대북제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자력갱생을 강화해 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UN의 대북제재를 준수했기 때문에, 대북제재 충격의 완화는 자력갱생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UN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UN의 대북제재에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와해되는 하나의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질서 변화가 향후 대북제재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 경제 변화의 주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김정은 ‘고난의 행군 결심’ … 전문가 ‘북한, 내부 통제 강화로 대미 교착 장기전 대비,’” VOA, 2021.4.9.

2 조선중앙통신, 2022.8.13.

3 SPN 서울평양뉴스, 2023.4.22

제재가 주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일차적인 대외협력 고려대상은 미국과 갈등하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런데 북·중 협력은 기존 협력이 복원되는 경향이 강하다면, 북·러 협력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본고에서는 북·러 협력의 구조와 변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기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밝히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II.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다. 미국과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⁴ 그리고 이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어 국제질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먼저, 전쟁의 현황을 검토해보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원조를 통해 전쟁에서의 군사적 승리와 대러 경제제재를 통한 러시아 국내에서의 레짐 체인지를 설정했다.⁵ 과연 이러한 우크라이나 승리의 조건은 실현되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승리의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서방의 군사원조가 미흡하다. 병력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3배 이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역병 25만 명과

4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3층위 복합전'이다.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경과, 전후 국제질서," (DMZ 포럼 2022 발표문, 2022.9.17.)

5 Barry R. Posen, "Ukraine's Implausible Theory of Victory: Fantasy of Russian Defeat and the Case of Diplomacy," *Foreign Affairs*, 8 July 2022, 이해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사계절, 2023, p. 162.

징집병 45만 명을 합쳐 대략 75만 명이다. 반면 러시아군은 포병을 중심으로 파병한 직업군인 20만 명, 양대 분리 공화국의 민병대와 와그너그룹, 체첸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는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군수물자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절대적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세는 미국의 현대전 전술 오류와 탈산업화에 기인한다. 즉, 미국은 현대전에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가 필요하며, 탄약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재래식무기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대량의 탄약을 제조할 수 있는 산업기반과 설비가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이는 미국이 21세기 자신의 산업기반을 중국으로 이전했던 데 기인한다. 그 결과 미국은 유사시에 사용할 총알과 포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다른 서방국가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탄약 지원이 요구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러시아는 국방개혁을 통해 2002년 이후 15년 동안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등 재무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일부 첨단무기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미사일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전력 차이는 그저 격차(gap)가 아니라 심연(abys)이라 평가되기도 한다.⁶

둘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 경제제재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첨단 기술과 관련 제품의 러시아 수출 통제, △달러결제망에서 퇴출 등으로, 러시아를 GVC(Global Value Chain)에서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⁷ 이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이란 등과의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GVC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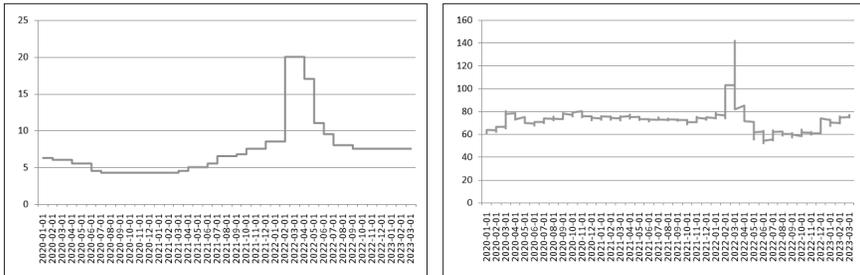
6 Andrei Martianov, *Losing Military Supremacy: The Myopia of American Strategic Planning*, Clarity Press, 2018, pp. 207~208, 이해영, 앞의 책, pp. 227~229

7 그 외 △러시아 정계와 군부 수뇌부, 대부호와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또는 동결, △제재 리스트 인물과 그 가족들의 비자 제한 등이 포함된다,

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화하여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봉쇄하고, 달러 결제망 퇴출에 대해서는 루블화 결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나라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점령에 따른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대체 정책과 더불어 핵심 기술 개발, 외환보유고 증대,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경제내구력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러시아 경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파국을 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 경제가 국제금융망 차단, 산업생산과 교역 위축, 루블화 폭락 등 악재가 겹치며 1998년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⁸ 그러나 IMF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2.2%, 2023년 0.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외 기준금리, 환율, 소비자물가 등의 지표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러시아의 기준금리와 환율(2020.1~2023.3)



자료: IMF(<https://www.imf.org/en/Data>)

8 미국 CNBC 방송(2022.3.3.)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최상위 부자 20명이 국외 자산 압류와 금융 동결, 루블화 폭락으로 총자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800억 달러(약 96조 6천억원)를 날렸다고 보도. 한편 미국 투자은행 제이피(JP)모건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러시아 GDP가 11%가량 급감하면서 1998년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받지 않고 승리하기 어렵고, 이러한 추가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일 것 이란 점이다. 그리고 이는 당초 서방의 예상 및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 언론 보도 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⁹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수령으로 미국은 과거 미소 냉전보다도 더 벽찬 중립 블록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직 면하여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정 치군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자재와 군수물자를 러시아로부터 저가로 확 보하는 한편 양자대결 구도보다는 다자주의를 통해 대미 갈등의 리스크를 완화 할 수 있다. 미·중 간 무역, 기술 및 금융 부문에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고,¹⁰ 대만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는 군사 전쟁 가능성마저 잠재하고 있다. 이 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 이 손을 잡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¹¹ 브레진스키가 경고한 바 있

9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2월 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군 이 반격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 장비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군 이 대규모 참호를 건설하고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반격 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 고 우려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의회에 제출한 다른 보고서에도 올봄 반격이 지난해 가 을 반격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담겼다.(YTN, 2023.4.12.)

10 2018년 중국산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중국도 무역 부문에서는 관세부과 와 공급망 경쟁으로, 기술 부문에서는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으로, 금융 부문에서는 자본접근성 및 결제망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예로 결제망 경쟁을 보면, 중국은 이미 제재를 받는 러시아 에 이어, 패트로 달러 체계를 구축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 글라데시 등으로 위안화 결제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1 귀화한 러시아계 미국인인 안드레이 마르티아노프는 미국의 대러 압박 정책을 ‘21세기 전략적 아둔 함’이라 맹비난하고 있다. “21세기의 전략적 아둔함이라고밖에 묘사할 길이 없다. 미국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을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 ... 1990년대부터 미국은 ... 러시아를 압박하는 치명적 원죄를 저질렀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도록 압박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에 모든 경제수단을 제 공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미국은 핵과 산업부문에서 초강국 두 나라를 상대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단 순히 경제동맹을 넘어 군사적 정치적 동맹으로 공식화된다면, ... 미국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될 것 이다”(Andrei Martianov, *Losing Military Supremacy*, 2018)

는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다.”¹²

Ⅲ. 향후 북·러 협력의 구조 및 기대효과¹³

협력은 서로의 필요(needs)가 충족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수요는 무엇이며, 제재국면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기로 하자.

우선, 양국의 수요를 검토해 보자. 러시아는 북한의 군수물자와 인력(군사 및 건설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107-mm 다중 발사로켓, Spike-NLOS 유사체 등의 로켓과 포탄 등에 대한 수요를 밝힌 바 있다.¹⁴ 또한 북한의 의용군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¹⁵ 그리고 건설 부문의 지원으로, 도네츠크 공화국, 루한스크 공화국 등의 재건사업에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의 원자재 및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¹⁶의 충격이 가장 큰 영역은 국산화가 어려

12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2017.

13 이영훈, 최장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북한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북한학연구』, 18권 2호, 2022.12. 참조

14 “Ответ HIMARS: КНДР может передать ДНР и ЛНР уникальное оружие,” (2022.8.4.), News.ru. 미국 백악관은 2022년 1월 20일 러시아와 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였다고 증거사진을 제시하였다.

15 ‘루스카야 베스나’(러시아의 봄), 2023.3.30. 연합뉴스, 2023.3.30.

16 현행 대북제재는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 수출제한, △유류 공급제한(원유 연간 400만 배럴(기존 수준 동결), 정유제품 50만 배럴(기존 공급량의 90% 차단),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 대북수출 차단, △해외 파견노동자 송환, △북한의 주요 수출품(무연탄 및 광물, 의류, 수산물 등) 수출금지, △대북 경험 금지, △해상 검색·차단 강화 등이다.

운 에너지, 설비/부품 등의 원자재의 조달과 자체 혁신이 어려운 기술개발이라 할 수 있다.¹⁷ 그런데 러시아는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2020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12.1%), 매장량은 세계 6위(6.2%)이다. 전체 수출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 또한 북한의 산업 설비는 과거 대부분 구소련의 지원으로 설치되어 여전히 작동 중이며, 현재 공장 현대화 등 개보수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 중공업 공장에서는 이러한 장비가 생산되고 있어,¹⁸ 북한의 공장 현대화에 필요한 예비 부품 및 장치를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주·항공 과학기술 분야의 강자이다. 이는 우주개발뿐 아니라 무기 개발 및 일부 산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협력의 실현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보복조치로 맞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러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러시아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개연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방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 기조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향후 북·러 협력 확대는 대북제재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기계·설비, 운송수단, 비료 등의 도입은 북한의 공장 정상화 및 식량증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내구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17 이영훈,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의 북한 기업소의 경영활동 분석: M. Porter의 value chain 모형 적용,” 『현대북한연구』, 25권 2호 (2022) p. 175. 자금조달의 제약은 1988년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금융제재의 결과로, 2017년 이후 본격화된 제재의 영향과는 거리가 있다.

18 “«Северокорейцы не выставляют нам счета после кажд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ООН»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 о мотивации Пхеньяна в признании ДНР и ЛНР,” (2022.7.18.), Известия.
<<https://iz.ru/1365120/nataliia-portiakova/severokoreitcy-ne-vystavliaiut-nam-scheta-posle-kazhdogo-golosovaniia-v-oon>> (검색일: 2023.2.25.)

항공·우주(인공위성, 미사일)를 비롯한 첨단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을 도입은 정체된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북·러 협력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현재 북·러 경제의 규모는 북한 무역의 5% 미만이고, 경제에 필요한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IV. 북한의 대외협력 확대 및 시사점

국제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최근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 불법 환적 사례가 포착되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관측된 북한의 불법 환적 사례는 모두 36건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포착된 건수와 동일하다.¹⁹

둘째, 공식적인 북한의 대외무역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접경지역 세관에 교역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문을 내렸다. 그에 따라 양강도 혜산, 자강도 만포, 함경남도 회령, 함경북도 온성 등 지방 세관들이 육로 통행 재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⁰ 또한 북·중 간 최대 인적 교류 통로인 조중(북중)우의교를 지나는 신의주-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간 도로 완전 개통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면, 화물트럭과 여객 버스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²¹ 교역재제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코로나 충격의 완화에 따른 것이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는

19 “북한 불법 환적 급증...올 들어 4개월 만에 작년치 수준 도달,” SPN 서울평양뉴스(<http://www.spnews.co.kr>), 2023.4.24.

20 “북한, 북중 육로 통행 재개 움직임...교역 준비 지시문,” SPN 서울평양뉴스, 2023.4.23.

21 “신의주-단둥 간 도로 완전 개통되나...차량 운행 정상화 ‘촉각’”, Daily NK, 2023.4.26.

이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북한의 경협 확대 조짐은 향후 대북제재의 균열과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대만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이 심해지면, 기존의 대북제재 준수 기조를 폐기할 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대만문제 거론 등 적대적인 對러, 對중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보복조치로 대북지원 강화(즉 대북제재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를 낳음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과 경제법 정비 동향

최은주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I. 서론

2021년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8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공개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경제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밝혔다.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은 재정정책 방향만을 제시하여 향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비·보강사업에 주력한다는 정책 기조 속에서 이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매년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경제 정책 및 관련 조치들을 결정하면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하여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는 방식이 안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각종 법안들의 내용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제정 및 개정된 법안만 해도 10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¹ 이 중 상당수가 경제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이다.

8차 당대회 이후 주요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측면으로 나뉜다. 먼저 2021년 8차 당대회부터 제시된 주요 경제 정책들을 법제화하였다. 북한은 최근 중장기 계획으로 낙후된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고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시, 군강화노선과 농촌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우선 과제로 건설부문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 법안들을 제정하였다. 둘째로, 경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법안에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

¹ 이는 국정원에서 2022년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上, 下』와 북한의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확인한 법안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수치이다.

관련한 내용들도 관련 법안의 수정보충을 통해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8차 당대회에서 정비·보강전략을 제기하면서 강조한 산업들에 대한 법안들도 제정하여 구체적인 발전 방향들을 명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추세들을 반영하여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 부문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관계상 주요 정책과 관련한 핵심 법안들을 중심으로 주목할만한 특징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당 정책의 법제화

최근 북한이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크게 3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이 장기적인 발전 목표로 제시한 전면적,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 군 단위를 거점으로 하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는 향후 10년에 걸쳐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농촌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 동안 평양에 1만 세대를 건설하고 각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후속 조치로서 핵심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제정하였다.

먼저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전면적 발전에서 시, 군이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단위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과 전망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로동신문』, 2021/1/9). 즉, 당 차원에서 지방 경제를 현대화하고 국가의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지역 현실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 군 단위에서 책임지고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관련한 법안들을 정비하였다.² 먼저, 2021년 10월에는 「지방주권기관법」을 수정보충하여 지방인민회의를 정례화하고 토의가능한 의안들을 국가의 중요결정관철에 관한 문제, 법집행정형 및 검열감독정형에 관한 문제, 인민위원회 사업총화 및 지방예산에 관한 문제, 기타 지역 실정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였다(국가정보원, 2022). 지방인민회의와 행정집행기관인 인민위원회의 역할과 좀 더 명료하게 구분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경계해온 당 조직의 행정대행현상은 제어하기 위해 정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시, 군발전법」을 채택하였다(『로동신문』, 2021/9/29). 본 법안에서는 시, 군 의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한 내용들, 특히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업과 농촌경리, 국토환경 보호 및 도시경영, 지방건설 및 운수, 상업유통과 무역 부문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관련하여 8차 당대회에서는 지방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매년 모든 시와 군에 1만 톤의 시멘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시, 군건설시멘트보장법」을 채택하여 법제화하였다(『로동신문』, 2022/1/30). 법안에는 공급 규모와 관련하여 2022년에는 각 지역에 5천 톤, 2023년부터는 매년 1만 톤씩 공급하도록 하고 품질 기준도 구체적으로 밝혀 공급 원칙에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지역 내에서의 시멘트 배정 및 이용과 관련해서도 농촌살림집 건설에 투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낙후된 농촌 지역 중 알곡생산계획수행률이 높은 농장의 살림집 건설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² 본 글에서 다루는 법령의 내용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2020년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상, 하』와 2022년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상, 하』에 실린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농촌발전전략(이하 ‘농촌혁명강령’)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식량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는데, 농촌혁명강령은 일차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정비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9월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하여 법적으로 담보하였다(『로동신문』, 2022/9/7). 북한 설명에 따르면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전면적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법으로서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에 규제되어 있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규범들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동신문』, 2022/10/29)

마지막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은 산업 건설과 함께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는 것을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평양시에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를 건설하고 검덕지구에도 2만 5천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면서 북한은 건설의 첫 단계인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이 제시한 건축 및 건설 원칙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21년에 「건설법」을 개정하고, 「건설설계법」을 채택하였다. 「건설법」에서는 설계와 시공, 준공 검사, 그리고 위법사항 및 관련 처벌 조항들을 구체화하였고 「건설설계법」에는 건설 분야 정책을 반영하여 설계 작성과 심의, 승인 절차를 명시하고 설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로동신문』, 2021/5/2, 2021/12/8). 2022년에는 「건설감독법」을 개정하고 감독 대상 및 의무, 감독 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였다(『로동신문』, 2022/12/8).

III. 내각의 역할 제고 및 역량 강화 방안의 법제화

북한의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북한은 내각책임제를 실시하여 군수공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 대한 전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국가 운영에서 당과 군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이 부문에 국가의 주요 자원들을 우선 배분해 왔다. 내각은 경제 정책을 총괄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과 군에 소속된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수성을 앞세워 내각의 경제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들에 대해 제대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민간 경제 분야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당과 군 산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및 군과 관련한 경제에 비해 인민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불균형 상황은 심화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라고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이 특권을 종식시키고 내각이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부문에 대해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2021년 7월 북한은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을 채택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단위특수화 및 본위주의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정보원, 2022). 법안에는 내각 및 내각의 산하기관들이 결정한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아 질서를 위반하는 각종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들이 적발되었을 경우 위반 수준에 따른 형사책임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북한이 내각에 의한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기관과 기업소, 단체들이 내각과 합의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의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내각이 보여주는 문제는 이와 같은 장악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량 부족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 결정해야 할 주체인 내각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산하 기관에서 보고한 계획 내용들을 단순 취합하여 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21년에 수립된 연간 계획에서 농업부문은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목표량이 설정되었고, 경공업과 전력부문의 생산 목표는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낮춰 잡는 등 보신주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본 회의에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 경제부장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경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내각이 각 부문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 과거의 폐단이 그대로 나타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북한은 2022년 5월 「허풍방지법」을 채택하였다(국가정보원, 2022). 이 법은 전사회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절과 3절에서 각각 경제 계산 및 농업생산에서의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명시하고 있어 경제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기관, 기업소, 농장 등 모든 단위가 대상으로 망라되어 있고 계획 수립 및 수행, 평가, 판매 및 유통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주체뿐만 아니라 묵인·방조한 사람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이러한 행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IV. 경제관리방법의 개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경제 운영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생산단위인 기업소와 공장, 농장에 실제적 경영권을 부여하여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각 단위에게 부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2019년 개정된 헌법에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명시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방법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기업소법」과 「농장법」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변화된 내용들을 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된 제도를 수용하고 적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의도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제도는 이러한 현실까지 고려하여 꾸준히 정비되어야 한다. 북한 또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해 왔다. 8차 당대회에서도 경제발전5개년계획 기간 동안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계획화 방법을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에 관한 법적 담보를 강화하며 현실과 과학적 이치에 부합하는 최적의 경제관리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계획 작성 및 수행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경제지도기관들은 공장 및 기업소들의 경영 활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제한 조건이나 복잡한 수속 절차 등을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결정된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21/4/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북한은 「인민경제계획법」을 대폭 개정하였다(『로동신문』, 2021/9/29). 개정된 내용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계획 작성에 있

어서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해 왔던 정책들을 반영할 것을 법에 명시하였고,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원화, 세부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작성, 심사 및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등록하도록 하여 계획 작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체 몫을 규정할 것을 법에 포함시켰다. 한편 실태 파악을 위해 각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계획 수행 자료들과 평가 시기 및 내용들과 관련한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충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계획화 사업과 관련하여 각 단위들이 하지 말아야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위반 시 그 책임과 처벌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줄였다.

「농장법」 또한 개정하여 농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조항들을 대폭 수정보충하였다(국가정보원, 2022). 「농장법」의 경우, 2015년 개정된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두 번씩 총 4번을 개정하였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장의 지도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농장의 임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농장에 대한 지원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지도보다 농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는 농장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농장의 경영 원칙으로 농장책임관리제와 함께 분조관리제 하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추가하면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유상유벌제를 삭제하고 분조관리제 하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로 일원화하고 포전의 분담, 포전 단위에서 수행할 역할들을 보충하였다. 이와 같이 포전담당책임제와 관련한 조항들이 최근에서야 정비된 것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착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장의 경영권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적 경영권을 부여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관리기구 및 노력조절권, 생산물처리권, 자금이용권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금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부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기존에는 농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직접 대부해주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민법」에 기관, 기업소 및 단체의 대부활동과 관련한 조항은 존재하였으나 이제 농장에서도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2023년 「대부법」을 채택하였는데, 대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로동신문』, 2023/2/3). 그리고 모든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알곡예상수확고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 간부와 농장원들을 참여시키고 과학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여 판정된 내용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수매 계획과 방법, 농장 자체적인 생산물 처리에서 지켜야할 내용들을 담은 조항들을 신설하였는데, 이미 「량정법」에 담긴 양곡의 수매와 교류 및 판매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2020년에 수정보충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V. 산업별 법안 정비

북한은 8차 당대회 및 이후 각종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별 과제들과 관련해서도 법안들을 정비하였다.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운영 전략은 정비·보강 전략으로서 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소재, 부품, 장비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과 경공업에 뒷받침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간공업과 관련하여

주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 및 기계 공업에 대한 과제들이 주요 회의에서 제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안들도 함께 정비되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업별 법안들을 제정한 것과 전력 관련한 법안들의 정비 내용이다.

2021년 7월에 북한은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을 동시에 제정하였는데, 법안의 목적으로 국가의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 토대를 강화하고, 각 공업별 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조건사업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발전전략과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로동신문』 2021/7/2).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금속공업법」에서는 주체철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화학공업법」에서는 국산화 원칙을 강조하고 환경보호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계공업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입과 관련한 항목이다. 「화학공업법」과 「금속공업법」에서는 수입과 관련한 조항이 전무한 반면 「기계공업법」에서는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기계류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류를 국산화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독점권을 갖도록 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반영하였다. 세 개의 법안 모두 위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명시하고 있다.

전력부문과 관련해서도 「원자력법」, 「전력법」, 「에네르기관리법」이 2021년에 연이어 개정되었다(국가정보원, 2022). 특히 8차 당대회에서 전력부문에 대해 ‘핵동력공업의 창설’을 언급하였는데, 이후 북한은 20여 년만에 「원자력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의 20조로 구성되었던 본 법안을 6장의 46조로 새롭게 구성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정보충하였다. 법안의 사명과 관련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핵동력공업발전원칙을 조항으로 넣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요 사업으로 밝히면서 핵시설의 건설과 운영, 핵물질 생산과

이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원자력부문에 대한 조건 보장 및 감독통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장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전력법」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개정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을 중점 목표로 강조해 온대로 법안에도 이를 새로운 장으로 구성하고 전력의 공급과 이용 등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및 그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에네르기관리법」에서는 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국가계획기관이 전담하였으나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단체들까지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경제 전반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할 것을 강조해 온 정책을 반영하여 보충하였다.

한편, 당대회 및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공개하지 않은 부문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정비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상업부문과 관련해서는 8차 당대회에서 국가상업망 확충을 통해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과제를 제시한 후 후속 조치들은 공개하지 않다가 2023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서 상업봉사활동을 개선하는 등 상업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고 밝혔다(『로동신문』, 2023/1/19). 반면에 법안과 관련해서 북한은 이미 2021년에 「사회주의상업법」을, 2022년에는 「편의봉사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을 채택하였는데, 상업부문에도 정보화 정책을 도입하여 제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법제화하였다(『로동신문』, 2021/5/2). 유통과 관련해서도 2021년에 「령수증법」과 「전자결제법」을 제정하였다(국가정보원, 2022). 「령수증법」의 경우 거래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전자결제법」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전자결제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사회급양법」을 채택한 바 있어서 상업부문에서 정책이 세부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급양이란 식음료 제품을 공급,

판매하는 분야로 상업의 일부이다. 북한은 「사회급양법」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면서 요리기술의 발전 및 사회급양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질서를 수립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안 제정 직후인 2022년 12월 15일부터 북한은 첫번째 밀가루 음식전시회를 개최하여 사회급양부문에서도 전시회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부문의 경우에도 8차 당대회에서 관광사업과 관련한 부문들만 제한적으로 공개하였고 이후에도 관련 정책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코로나19로 대외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대외경제부문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관련 법안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북한의 기관과 기업소, 단체도 투자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충하였는데, 이미 개발당사자로 북한의 기관과 기업소도 포함시켜 놓은 바 있어 이에 맞춰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제중재 및 재판 방식에 조정 방식을 추가하였다. 한편, 2021년에 「국제상품전람회법」을 채택하였다(국가정보원, 2022). 북한은 이미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나선국제상품전시회, 북중국제상품전람회 등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안을 법제화하였으며,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관련 기관 및 기업소, 단체들도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VI. 결론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제시하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각종 법안들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부문의 경우 김정은 집권 이후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를 법안에 반영해 왔다. 북한이 경제 관리 방법과 정책에 대해 과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시기별 변화 양상과 현실에서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현상에 대해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러한 조건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내용들을 통해 그 일단을 파악해 볼 수 있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에 정비된 법안들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목된다.

먼저, 경제 관련한 정책들을 법에 반영하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8차 당대회에서는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들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반영하는 법안들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구체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 과거에는 당 차원에서 제어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 법안들을 채택하여 해당 사항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법적으로 담보하였다.

두 번째로 정책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이전에 정비된 법안 내용들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책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법안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술한 법안 이외에도 2020년부터 최소화되었던 무역과 관련해서도 「무역법」과 「세관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대외 경제정책들을 검토하고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는 사업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정비되는 법안들을 통해 정책적 지향과 목표뿐만 아니라 법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

다. 최근 들어 다수의 법에서 위법 행위들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조항들을 대대적으로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벌법」에서 경제관리질서를 위반한 경우와 관련하여 각종 위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고, 경제정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안들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북한 당국이 인식하는 주요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20, 『북한법령집 上,下』,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上,下』, 국가정보원.

최은주. 2022,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 『세종정책연구 2022-1』, 세종 연구소.

필자 미상. 2021,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1월 9일.

필자 미상. 2021, “현시기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 나서는 중요문제,” 『조선중앙통신』, 4월 3일.

필자 미상. 2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 회의 진행,” 『로동신문』, 5월 2일.

필자 미상. 2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전원 회의 진행,” 『로동신문』, 7월 2일.

필자 미상. 2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1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9월 29일.

필자 미상. 2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전원 회의 진행,” 『로동신문』, 12월 15일.

필자 미상. 20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9차전원 회의 진행,” 『로동신문』, 1월 30일.

필자 미상. 20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 회의 진행,” 『로동신문』, 9월 8일.

필자 미상. 2022,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자,” 『로동신문』, 10월 29일.

필자 미상. 20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로동신문』, 12월 8일.

필자 미상. 20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2022년) 사업정형과 주체 112(2023)년 과업에 대하여,” 『로동신문』, 1월 19일.

필자 미상. 20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 회의 진행,” 『로동신문』, 2월 3일.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I. 개관: 제8차 당대회 전후 북한 대외경제 정책

노동당 제8차 당대회는 2021년 1월 5~12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북한당국은 제8차 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년)의 성과가 부진했음을 인정했다. 성과부진의 배경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과 같은 외부요인과 더불어 목표의 비현실성, 과학기술과 경제사업의 괴리, 경제사업 체계·질서의 불합리성 등 주체적 운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지적되었다.¹ 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경제 운용을 ‘제재와 코로나19 버티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²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5년)을 추진할 북한의 대외환경이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이 추진되었던 기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의 운영도 제재와 코로나19, 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버티내기 전략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무역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 가장 큰 당면과제는 코로나19 국경봉쇄(2020년 1월)로 중단되다시피 한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다. 시장물가는 수입 감소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상승 압력이 큰 가운데, 쌀과 밀가루 등 필수 원부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편집국,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9.

2 임수호,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초와 시사점”, 『INSS 전략보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1

II. 대외무역

2021년과 2022년, 북한은 그 어느 해보다 대외무역 분야에서 어려움이 컸던 해이다. 2020년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였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대외무역이 거의 중단되었다. 문제는 수입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자체 조달이 어려운 산업용 원부자재나 중간재(플라스틱 제품, 고무), 식료품(밀가루, 설탕, 조미료, 대두유) 등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경이 막히고 이들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생산이 둔화하고 주민들의 수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1년 북한은 무역, 특히 수입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先방역시설 구축, 後 무역재개의 방식으로 수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갔다. 대표적인 것이 의주 비행장을 화물열차 수입 화물의 방역시설로 전환(2021년 3월경)한 것이다. 북한의 무역은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과 열차와 트럭을 활용한 육상 운송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해상 운송은 정상적으로 운용되었으나 열차와 트럭의 운용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 의주 비행장을 방역장으로 전환한 것은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의주 비행장을 통한 무역 재개도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해운 운송을 늘리기 위하여 룡천항도 방역장을 설치(2021년 4월경)하였다.

그러나 2021년 북한의 시도는 당해에는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였는데, 당초 북중이 「북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021년 10월)」을 발표하면서 2021년 11월에는 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랴오닝성에 2021년 11월 4~27일 기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열차무역이 재개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2021년 북한의 무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2022년은 북한이 수입을 거의 정상화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1월에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였고, 2023년 1월에는 중국 훈춘 - 북한

나선시 간에 화물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특히 2022년 5~8월 동안 북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은 북한이 과감하게 포스트코로나(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북한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 과감해졌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동안 북한의 화물열차 운행은 2차례에 걸쳐 재개와 중단이 거듭되었는데, 제1차 운행 재개는 2022.1.17.~4.29 동안 이루어졌으며 중국 단둥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중단되었다. 그러나 제2차 운행은 2022.9.26.~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2022.11월에 단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단둥 현지에 화물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2022년 5~8월 동안 경험하였던 북한내 코로나19 확산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두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배, 열차와 더불어 화물트럭의 운행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 북한으로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 화물의 흐름을 중국 ↔ 북한 양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문제는 2023년 하반기까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5월 현재 북한의 수입은 2019년(대북제재 이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수입 물량을 회복했을 정도로 정상화되었다. 불완전한 무역 정상화 이기는 하나, 2021~2022년 동안 북한이 준비하고 추진하였던 방역설비의 확충과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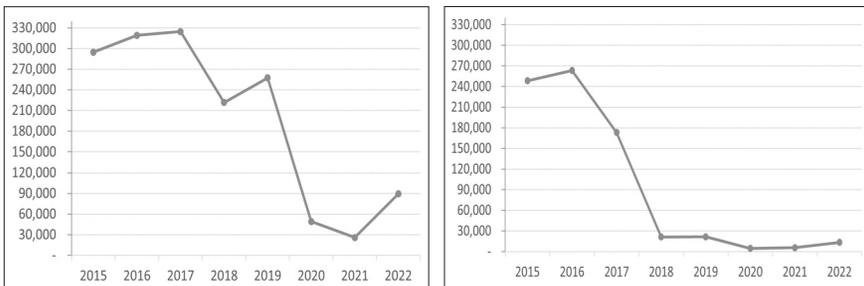
북한의 대중 수입³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22년 8월 코로나19 북한 확산의 안정적인 마무리, 9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

3 북한 대중 무역

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2020년은 4억 9,106만 달러, 2021년 대중 수입은 2억 6,016만 달러로 2020년 대비 47.0% 감소하였다. 2021년은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산업생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은 8억 9,335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43.4% 증가하였는데, 북한당국이 수입화물의 통관·검역 기간을 단축하고 2022년 9월부터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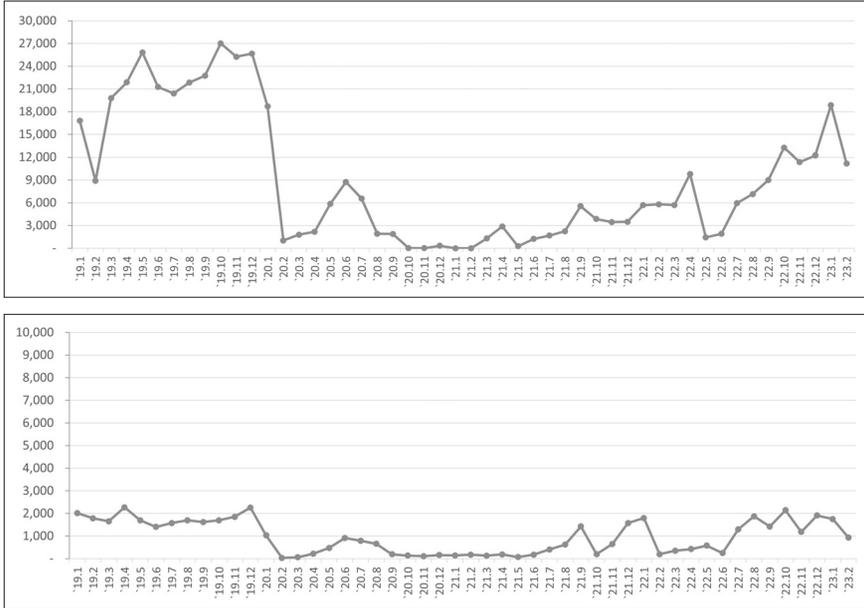
북한의 대중 수출은 수입과 달리 코로나19 국경봉쇄보다는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2021~2022년 동안 소폭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다. 2020년 대중 수출은 4,800만 달러였으나, 2021년은 5,787만 달러로 47.0% 증가하였다. 2022년 대중 수출은 1억 3,4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2% 증가하였다. 대중 수출이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는 것은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 섬유·의류, 농수산물의 수출이 금지되었고 이후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 2015~22년 연도별 대중 수입(좌)과 수출(우)
(단위: 만 달러)



자료: 최장호, 최유정. 2022.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활로 모색』,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7

〈그림 2〉 2019~23년 월별 대중 수입(상) 수출(하)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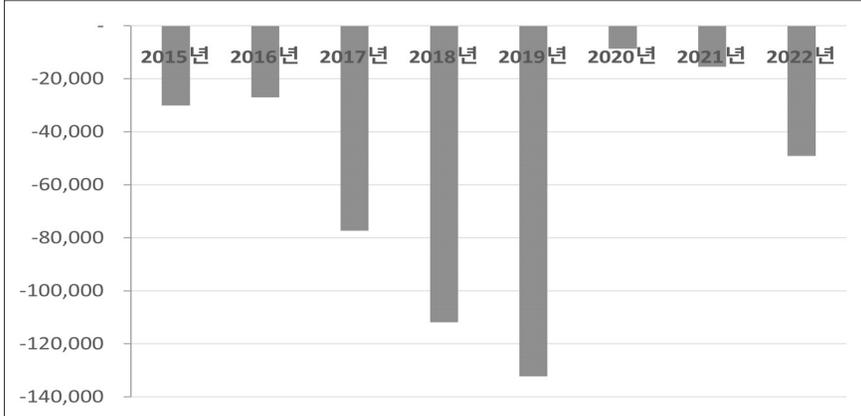


자료: 중국 해관 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상품수지는 2020년 -4억 4,306만 달러, 2021년 -2억 229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3% 개선, 2022년 -7억 5,923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5.3% 악화되었다. 2023년은 약 15억 달러 내외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경제가 2~3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적자 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UN 대북 제재 강화기(2017~2019년) 동안 연평균 상품수지는 -19억 5,881만 달러였는데, 당시 북한경제에 주요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3〉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

(단위: 만 달러)



자료: 최장호, 최유정. 2022.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활로 모색」.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

2022년 북한의 수입은 농업, 플라스틱·고무, 화학, 섬유·의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조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은 민생 소비품(대두유, 밀가루, 설탕, 조미료, 담배)가 주를 이룰 것이며, 화학은 농자재(비료, 농약), 방역용품(의약품, 소독용품), 섬유·의류는 섬유 원부자재 등이 주로 수입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수출은 주로 광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텅스텐과 텅스텐 암석, 몰리브덴광과 정광), 가공금속(합금철, 인조흑연, 유리), 전기에너지, 비단제품, 임가공품(가발·가수염, 속눈썹, 휴대용시계무브먼트, 관악기) 등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산업생산이 살아날수록 임가공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수출 금액 자체가 작아 산업 정상화와 회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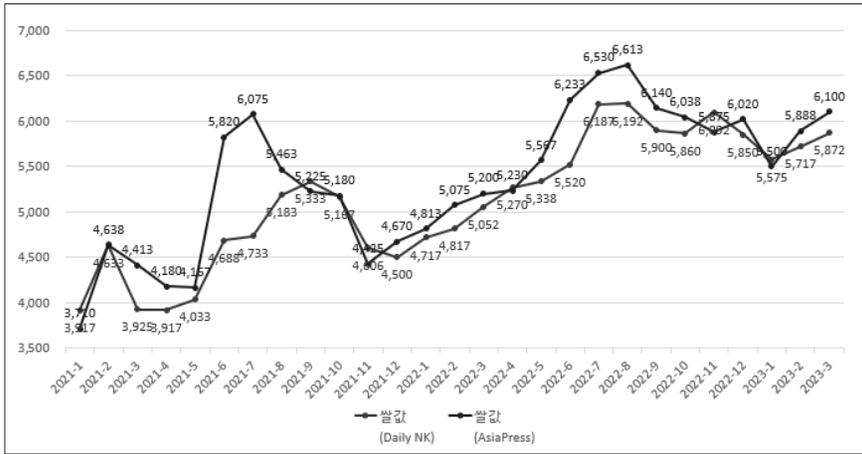
III. 시장(장마당) 물가: 쌀값, 환율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내외 악재(전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곡과 주요 수입 식료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되었다. 둘째, 장마당이 코로나19 확산과 당국의 통제 정책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개인 거래가 확산되고 소규모 거래도 확대되었다. 셋째, 최근 들어 북중 무역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물가가 안정화되는 양상이나, 시장 물가가 이미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경봉쇄 정책과 북중 무역의 중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통의 어려움은 주요 식료품과 수입 품목의 시장 가격을 상승시켰다. 북한이 농업 부문(농자재, 식료품)에서의 대중 수입은 비교적 지속하였고,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곡(쌀,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시장 물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2021년 이후 장마당 쌀값은 곡물 수확기를 제외한 기간 전반에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1년 5월 이전까지만해도 5,000원을 하회하던 쌀값은 2022년 6월 들어 6,000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그림 4).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1년 말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8월에는 급기야 7,000원을 상회하는 날도 있었다. 2022년 쌀 가격은 최근 3개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그만큼 수요량 대비 시장에 유통되는 쌀의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실제로 북한은 2022년 3, 4, 7월 중국산 쌀을 재수입하기 시작한데 이어 10월부터는 장립종 쌀을 포함하여 매일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2023년 2월에는 약 1만 8천톤의 쌀을 수입하였다. 북한의 곡물 수입 확대는 옥수수 수입 재개로까지 이어졌는데, 2023년 2월에는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00톤 가량의 옥수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기도 하였다. 옥수수 가격은 전월 대비 약 2.5% 하락한 3,180원에 거래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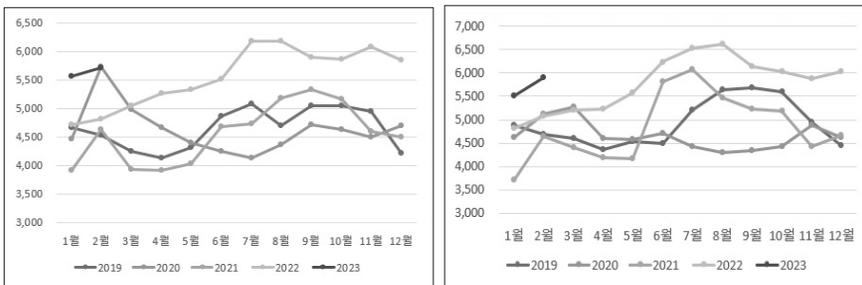
나, 여전히 3,000원을 상회하고 있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그림 4> 북한 시장(장마당) 쌀값 변동 추이(2021.1.~2023.3)



자료: Daily NK, AsiaPress

<그림 5> 북한 시장의 쌀 가격 추이(2019~23년)



자료: DailyNK(좌), AsiaPress(우).

2023년 1분기 현재 북한 장마당 쌀값은 6,000원 전후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4월 춘궁기가 다가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개년 쌀값 동향과 비교하였을 때 올해 3월 쌀 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시장 물가 상승에 대해 북한 당국은 △곡물 유통 제한, 양곡전매제 등 시장통제 정책, △대체 품목 생산(수입) 독려를 통해 대응하였다. 당국은 수확된 식량을 양곡 판매소를 통해 관리·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곡물의 출처도 엄격히 체크하기 시작하였다.⁴ 특히 2022년 5월에는 북한 내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곡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이 물자의 유통이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 당국은 일부 장마당과 상점을 폐쇄하고, 철도역·도로 등을 차단하였으며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폐쇄하는 등 이동 금지 조치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와 금지 조치는 오히려 개인 간 거래를 활성화 시켰으며, 당국의 가격 통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상인들의 가격 담합이 암암리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 시기 수입 물가와 시장 물가 또한 괴리를 보였다. 북한 당국은 2022년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곡물 수매와 유통 과정에서의 비리 척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곡물 생산량을 거짓 보고 하거나, 개인이 양곡을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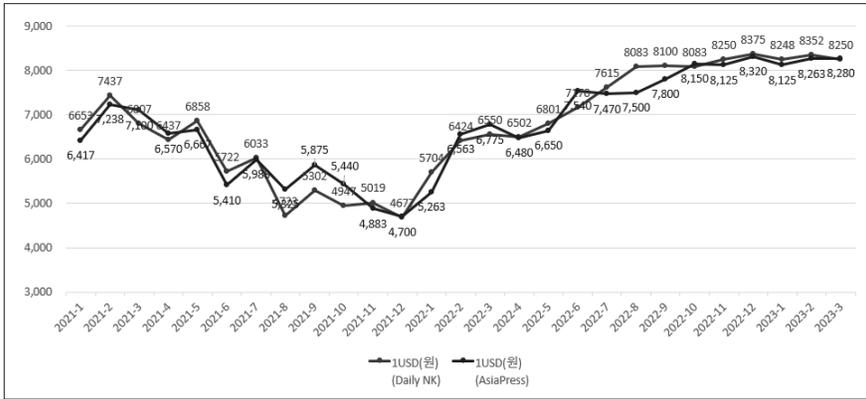
결국 북한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양곡의 국가전매제를 목표로 장마당에서 주요 곡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백미와 옥수수 판매가 금지되고 콩, 감자, 고구마 등 비양곡만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양곡은 국가가 운영 중인 양곡판매소에서 구입해야하는데, 양곡판매소 곡물 가격은 시장 대비 20% 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재고가 충분하지 않아 식량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자택에서 개인 거래를 하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 통제 이외에도 대체 품목 생산, 수입 등의 보완적인 정책도 도입되었다. 대두유 대신 대두 혹은 대두박을 수입하여 대두유를 추출하는 등 대체 품목을 수입하거나, 설탕·식용유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4 양곡판매소라는 용어가 북한 관영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21년 11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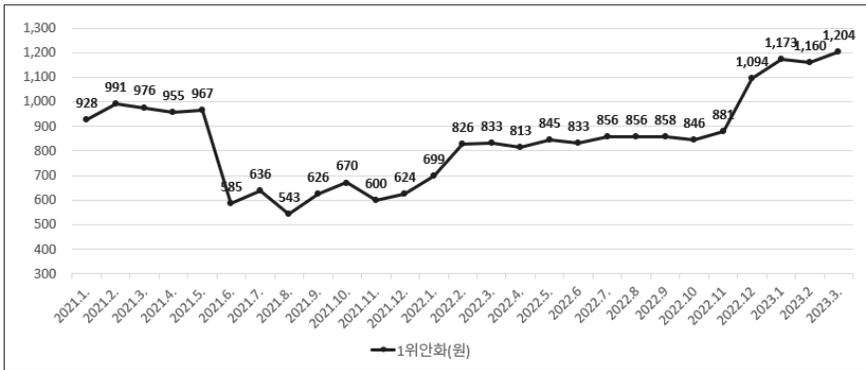
5 「북, 양곡 유통 비리에 칼 빼들었다…정치국회의서 통제책 다뤄」(2022.9.26.) 『연합뉴스』

서는 당·기름 작물 재배와 같이 대체 품목 생산을 독려하였다. 당국의 통제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자 주민들은 소량 판매/구매 전략으로 물자난에 대응하였다. 예컨대 콩기름이나 설탕과 같은 주요 식료품을 소량으로 판매·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량 구매가 기존 수량 구매보다 비싸게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그림 6〉 북한 시장(정마당) 달러화(상), 위안화(하) 환율 변동 추이(2021.1.~2023.3)



자료: DailyNK, AsiaPress.



자료: AsiaPress

한편, 북중 무역 정상화에 따라 원/달러, 원/위안화 환율은 평년(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한해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북중 무역 정상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북중 무역이 정상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연말부터 현재까지 8,000원 초반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원/위안화 환율은 2021년 5월 급락한 이후 2022년 2월 소폭 상승한 800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2022년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현재 1,200원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III. 전망

북한은 앞으로 무역 분야에서 포스트코로나(위드코로나)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무역 통로인 단둥 - 신의주 간 거래에서 화물 트럭 운행을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2023년 5월) 화물 트럭은 훈춘-나선시 구간에서 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 운용 경험을 북중 무역 전반으로 확산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배를 이용하는 해운 운송과 열차와 화물트럭을 이용하는 육상 운송이 모두 재개되면 북한의 수입은 거의 정상화되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은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의 전자제품, 생산설비와 장치, 차량·열차 등의 운송수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중 무역이 정상화 될수록 북중 간에 비공식 무역(밀무역)도 재개되기 시작할 것이며, 그에 따라 UN 안보리 대북제재 품목의 암묵적인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의 육상 무역은 '중국 → 북한'으로 일방향, 즉 북한의 대중 수입에만 활용되고 있으나, 포스트코로나 전환이 되면 될수록 '중국 ↔ 북한'으로 양방향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수입은 대폭 증가하는데 반

해, 대중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 분야의 포스트코로나 전환이 이루어질수록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커질 것이다. 약 15억 달러 내외의 규모로 커질 수 있으나, 북한에게 이 정도의 상품수지 적자는 2~3년은 큰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4 분기까지 쌀 수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에만 7만 4,866톤 수입되었는데, 이는 2017~18년 연평균 3만 9,556톤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쌀 수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둘다를 위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언론에서 2023년 1월 말경에 북한 개성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으나, 정작 춘궁기인 2023년 3~5월 중에는 아사자 확산에 대한 후속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렵기는 하나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의 쌀 가격을 보면, 북한 당국이 양곡전매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곡물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에도 양곡전매제를 실시하였으나 유명무실해진 바가 있어 국가의 식량 수급 통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마당(시장)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시장의 개장이 격일제 또는 반나절 개장으로 통제가 되었는데, 시장 방역 통제를 계기로 상인들이 시장이 아닌 본인들의 집, 즉 일반 가게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이 잦아졌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시장과 일반 가게 판매를 병행하는 일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장마당 근처에서 암시장이 형성되어 운용되었으나, 코로나 19 이후에는 일반 가게에서 암시장 거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장마당에서 소량 판매/구매, 저가 품목 거래 확산 등과 함께 상품 판매와 소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북중 무역이 정상화되고 있으나 대중 수입 회복세에 비해 대중 수출 회복세가 더디고,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출 다변화 및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황이다. 국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화벌이가 확대되지 못하면 결국 외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환율 상승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도 환율이 보합 횡보하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최장호, 최유정. 2022.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활로 모색」. 『오늘의 세계 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report/preliminary.html>)

AsiaPress(<http://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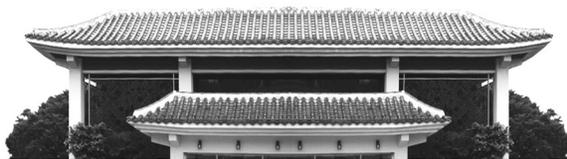
DailyNK(<http://www.dailynk.com/>)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김 두 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이 글의 '제8차 당대회 이후 살림집 건설사업 실적' 등 일부분은 김두환(2023)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본문 중 참고문헌을 표기하지 않고 언급한 일반적인 북한 현황은 「북한 건설·개발 동향」(토지주택연구원 각 연도, 분기)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I. 들어가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은 매년 평양에 대규모 살림집 거리를 조성해 왔다. 당초 2016년 건설 예정이던 려명거리 사업이 함북지역 홍수피해 복구사업으로 전체 인력을 돌리면서 1년 늦은 2017년에 완공한 이후 평양 살림집 거리 조성사업은 3년간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제8차 당대회 이후 2021년부터 평양에 매년 1만 세대 살림집 거리 조성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양에 대규모 살림집 건설사업은 없었지만,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각각 1,900세대, 4천 세대, 수천 세대 살림집 건설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2019년 양덕온천관광지구를 조성하면서 천수백 세대 살림집을 건설한 바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하는 중에도 북한이 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의 주요 도시와 농촌에 대규모 살림집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Feron, 2017). 대북제재,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국경통제,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석기, 2022, 2023). 이런 중에도 어떻게 북한은 예전처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대규모 살림집 건설을 계속할 수 있는가? 실제 북한의 살림집 건설 현황은 어떠한가? 북한에서 살림집 건설사업은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가지는가? 살림집 건설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전망은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과 실적을 살펴본다.

II. 건설정책의 방향과 전략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2021.1.5~12)의 사업총화 중 경제건설 부문에서는 지난 5년(2016~2020년)을 평가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이 핵심 개념과 풍토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노동신문, 2020.01.09.).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상 요구와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인민들의 반영과 평가를 기준으로”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주요 산업부문의 성과에서는 다소 일반적인 평가로 그치고 뚜렷이 강조하는 성과들이 많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 수행을 평가하면서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했다고 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대외적, 객관적 요인으로 미국 등의 대북제재, 자연재해, 보건위기 등을, 내적, 주관적 요인으로 “5개년 전략이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똑똑히 세워지지 못”한 점, 과학기술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견인하지 못한 점, 불합리한 경제사업체제와 질서를 정비보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언급하면서 기본방향으로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핵심방향으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제시하면서 자력갱생의 전국화, 계획화를 강조하였다. 향후 계획에서 건설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건설부문의 기본과업을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 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건설의 두 전선으로는 ‘경제토대 강화를 위한 산업건설’과 ‘인민 물질문화적 수요 보장 건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양시에 연간 1만 세대씩 5년간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함경북도 광산도시인 검덕지구에 2만 5천 세대

살림집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건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기계 공장에서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적극 개발 생산하고, 건재공업의 기본과업으로 “800만 톤의 세멘트 고지를 점령하고 마감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기존 세멘트 공장을 개건현대화 및 신설하고 마감건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내생산을 증대하며, 국산 원료 칠감과 외장재 생산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건축 양식은 “세계적인 건축발전 추세에 맞게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는) 령탄소 건물, 령에너르기 건물을 많이 건설할 수 있게 필요한 건재 생산준비를 예견성 있게 착실히 추진”(괄호 안은 저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건재 수요는 지방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건설·개발 관련 총화 내용으로 ‘산림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 ‘국토환경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제정과 시행’, ‘치산치수 사업으로 자연재해 예방’, ‘도로건설과 관리’, ‘동서해안 건설을 통해 해안연선 일신’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경영 과제는 ‘살림집 보수대책’, ‘먹는 물 생산능력 확장과 질 개선’, ‘오수정화장 보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사업은 “인민들의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대외경제사업 부문에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는 ‘관광대상들의 정비, 홍보방식 개선, 관광 노정과 안내도 다양화’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금강산지구를 현대적 문화관광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교통 관련해서는 철도 현대화와 수송사업 개선으로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철길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량화, 표준철길구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평양지하철도 기술개선, 평양지하철도역 현대화를 추진하고,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여객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경제-건설-살림집 정책의 방향과 전략

경제 부분	기본방향	인민경제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의 토대 구축	
	핵심방향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자력갱생의 전국화와 계획화	
	건설 부분	기본과업	살림집 건설 등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 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
		건설의 두 전선	‘경제토대 강화를 위한 산업건설’, ‘인민 물질문화적 수요 보장 건설’
	살림 집 계획	주요 살림집 건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연 1만 세대씩 •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장비와 기공구 적극 개발 생산 • 건재공업 증산: 800만 톤/년 시멘트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장 현대화 및 신설 • 마감건재 자급자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건재 국내생산 증대, 국산 원료 칠감과 외장재 생산 기지 확보 • 령탄소 건물, 령에네르기 건물 건설
	이외 건설분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 • 국토환경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제정과 시행 • 치산치수 사업으로 자연재해 예방 • 도로 건설과 관리 • 동서해안 건설을 통해 해안연선 일신 • 도시경영 과제: ‘살림집 보수대책’, ‘먹는 물 생산능력 확장과 질 개선’, ‘오수정화장 보강’ 등 • 관광사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대상들의 정비, 홍보방식 개선, 관광 노정과 안내도 다양화 - 금강산지구를 현대적 문화관광지로 전환 • 철도·교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와 수송사업 개선, 안정성 확보, 증량화, 표준철길구간 확대, 평양지하철도 기술개선, 평양지하철도역 현대화 공사,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여객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Ⅲ. 살림집 건설사업 동향

1. 예산과 신문기사 기준 완공사업

북한의 국가 예산지출계획에서 예산지출 전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에는 1.1%, 2022년 1.1%, 2023년 1.7%이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지출 전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5~6%였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23년 ‘인민경제발전’ 지출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였으며, 대규모 살림집 건설사업을 포함하는 ‘기본건설’ 지출예산은 0.3% 증가하여, 예산 전체는 물론이고 인민경제발전 부문의 증가율보다도 낮았다. 그런데, 농업부문의 증가율은 모든 부문의 증가율에 비해 가장 높은 14.7%였고 농업부문에 농촌살림집 건설이 포함된 것을 고려할 때, 건설사업 전체의 지출예산이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율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 연도별 주요부문별 예산 지출계획의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지출 전체	5.6	5.4	5.1	5.3	6.0	1.1	1.1	1.7
인민경제발전	-	-	4.9	5.4	6.2	0.6	2.0	1.0
- 농업	4.3	4.4	-	-	-	-	-	14.7
- 기본건설	13.7	2.6	-	-	-	-	-	0.3
비상방역 사업	-	-	-	-	-	-	33.3	0

자료: 노동신문의 각 연도 최고인민회의 국가예산 발표 내용(여기서는 토지주택연구원(2023)의 해당 표 중 일부를 재인용)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에 보도된 ‘완공 기사’ 기준으로 2016년 이후부터 북한 살림집 사업 건수를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건이었

는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1건과 16건으로 기사에 등장하는 완공사업 건수는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한 2016년 이후에 살림집 건설은 오히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보아도 역시 증가 추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사업이 신문기사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고 기사 건수가 사업물량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실제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더 살펴보도록 한다.

〈표 3〉 2016~2022년 북한 살림집 사업 완공 기사 건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완공 기사 건수	7	10	9	11	20	11	16	84	12.0

자료: 「북한 건설·개발 동향」(토지주택연구원, 각 연도)

2. 제8차 당대회 이후 주요 살림집 건설사업

여기서는 평양과 지방 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의 주요 살림집 건설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1) 평양 살림집 거리 조성

제8차 당대회 이후 평양에서 매년 1만 세대와 추가 살림집 건설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 송화거리와 경루동 지구를 완공하였고, 2023년에 화성지구 1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화성지구 2단계와 서포지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평양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의 ‘송화거리 살림집 건설사업’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의 첫 사업이다. 2021년 3월 23일 착공하여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살림집과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등을 건설하고,

1년여 만인 2022년 4월 12일에 준공식을 개최했다. 송신·송화지구는 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이며, '집사정이 곤란하던 평범한 근로자들'이 입주 대상이다. 입사순위는 철거지역 주민, 지구 소재 사령부 산하 기지·공장 종업원, 호위국 산하 식료품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으로 알려져 있다(데일리NK, 2022/01/20).

'경루동 지구' 사업은 당초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로 불리던 사업이다. 송신·송화지구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4월 14일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본평양 지역의 보통강구역 보통강변에 위치한다. 북서쪽으로 보통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만수대의사당과 만수대언덕, 남쪽으로는 인민대학습당, 서남쪽으로는 인민문화궁전이 위치한 요지이다. 약 12만㎡ 부지에 800세대를 건설하였다. 경루동 지구는 북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다락식 주택구로, 건물 배치와 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소층과 다층 살림집들을 배합하였으며, 다락식주택들의 유형별 특성과 입면형성 요소들이 특색 있게 살아나도록 설계하였다. 보통강변의 공원과 연계하여 주택구획과 주변의 원림녹화를 실현하고 친자연, 친환경을 제고했다. 경루동 살림집들은 모범적인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한다.

'화성지구 1단계 사업'은 송화거리에 이어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계획으로 추진한 두 번째 사업이다. 현대적 도시구획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3년 내외로 수 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을 함께 건설한다.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남북정상회담 장소) 인근으로 송신·송화지구에 비해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화성지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을 화성구역으로 변경하였다.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위주로 살림집을 배정하였다(데일리NK, 2022/11/15). 화성지구 1단계 사업 준공식은 2023년 4월 16일 밤에 개최되었다(SPN서울평양뉴스, 2023/04/17).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의 세 번째 사업인 '화성지구 2단계 사업'이 2023년 2월 15일 착공하였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2022.12.26~31) 경제부문 결론에서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 중요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과 추가로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기로 결정했다(노동신문 2023/01/07). 이와 함께 농촌 건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건재공업 부문의 증산투쟁, 시멘트공장들의 생산 활성화와 정비보강 대책, 건재와 건구들의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노동안전규율과 공사의 질 향상에 각별히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화성지구 2단계 사업에는 조선인민군 군인 건설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평양의 북쪽 관문지역인 ‘서포지구’에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별도로 4천여 세대의 살림집 거리 조성에 착수하였다(조선신보, 2023/03/03). 연합뉴스(2023/02/27)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4,100세대를 건설한다고 전하고 있다. 착공식은 2023년 2월 25일에 개최되었다. 이 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3,700세대 거리 사업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포지구 건설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도맡아 한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에 참여한 청년 건설전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뉴스, 2023/02/26).

2) 지방 도시와 농촌 살림집 건설

지방에서는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련포 온실농장마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공되었다. 또한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촌 살림집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천시 살림집 건설사업’은 2020년 이 지역의 홍수피해 복구사업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홍수피해 복구사업을 통해 2020년 말에 2,300여 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건설하였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진행 중이던 피해복구 사업을 검덕지구 1단계 사업으로 규정하고, 새로이 2단계 사업으로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 산간도시, 광산도시”로 전변시키고, 5개년 계획기간에 2만 5천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5개년 계획의

1차 연도가 지난 후, 2022년 1월 1일 기사에서는 검덕지구가 “세상에 없는 광산 도시, 사상초유의 산악협곡 도시”로 꾸려졌다고 하면서 직전 연말에 진행된 수 천 세대 현대적 살림집 입사모임 소식을 전하였다. 단천시 여러 동의 깊은 협곡을 따라 단층, 소층, 다층, 고층, 다락식 살림집들이 조화롭게 건설되었다고 한다. “검덕지구에 지난 2년 동안 1만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데 이어 2023년에도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한다(SPN서울평양뉴스, 2023/04/24).

함경남도 함주군의 련포온실농장은 2021년 연말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주요 국가건설정책 대상으로 발표한 후 2월 18일에 착공하였고, 착공 후 약 8개월 후인 10월 10일에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전체 면적 280정보(약 2.77㎢)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30여 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 1천여 세대 살림집 등의 완공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납새생산기지라 자평하고 있다. 온실농장 준공에 이어 약 1천여 세대 살림집 입사 모임을 11월 20일에 진행하였다. 113개 동, 99가지 상이한 형식의 경루동에 버금가는 수준의 살림집이 완성되었다고 전하면서 유명 관광지 이상의 경관을 제공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채택하고, ‘부유한 농촌 만들기’,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새 농촌건설의 목표로 제시하였다(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 2022/01/01). 이후 자력갱생의 기초에서 지역균형발전, 자력갱생과 식량자급을 위해 지역공업 발전과 함께 2022년부터 ‘농촌 살림집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초에는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완수하지 못했으며, 향후 필요한 과제로 ‘자체 건설역량 강화’, ‘건설의 기계화’, ‘지방 자체 마감건재생산기지 건설’을 제시하였다(노동신문, 2023/02/15). 이상에서 살펴본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살림집 건설사업 현황과 실적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살림집 건설사업 현황

구분	평양시		지방	
	5만 세대 건설사업	추가 사업	지방도시	농촌 살림집
2021년	송화거리 - 1만 세대, 2022.4.12. 준공 - 철거지역 주민, 기지·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경루동지구 - 800세대, 2022.4.14. 준공 -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 등	검덕지구 2단계 건설사업 추진	
2022년	화성지구 1단계 - 1만 세대, 2023.4.16. 준공		런포 온실농장 1천여 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사업 계속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1정책과제로 전국 각 시, 군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 추진
2023년	화성지구 2단계 - 1만 세대, 2023.2.15. 착공	서포지구 - 4,100 세대, 2023.2.25. 착공 - 백두산영웅청년 돌격대 등 공사 담당	검덕지구 사업 계속	계속 진행 중
실적 종합	2만 세대 완공, 1만 세대 건설 중	800세대 완공, 4,100 세대 건설 중 * 2021년 초 당시 이미 건설 중이던 1만 6천 세대는 별도	검덕지구 1만여 세대 완공 및 추가 건설 중, 런포 온실농장 살림집 1천여 세대 완공	2022년 노동신문에 보도된 기사 기준으로, 2022년 전국 각 시군에 총 1~2만 세대 건설 추정

*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IV. 살림집 건설정책의 실적과 의의

먼저 살림집 건설 규모를 보면, ‘대북제재, 코로나, 자연재해의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북한 당국과 전국의 해당 단체, 기관

들이 총력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평양에 연간 1만 호씩 건설을 계획하였고, 2022년에 최소 10,800세대를 준공하고 매년 1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국 차원의 계획 물량 이외의 개별 건설사업 실적과 평양의 군 지역에서도 시행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 물량(2022년 1천 수백 세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평양시의 아파트 등 주택건설 실적은 이를 크게 넘어설 것이다. 2021년 5개년 계획 시작 당시에 총 5만 호 이외에 이미 건설 중이던 1만 6천여 호를 포함하여 5년간 약 7만 호를 건설한다고 하였다. 경루동 지구(2021년 착공) 800세대와 서포지구(2023년 착공) 4,100세대도 1만 세대 건설계획 물량이나 당초 건설 중이던 1만 6천여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5년간 최소 7만 9백 호, 연간 14,180호를 건설하게 된다. 이는 인구 1천명 당 연간 3.6(기존 1.6만호 제외)~4.6(1.6만호 포함)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연간 4.1호/천명과 비슷한 수준이다.¹ 2015년에 완공한 미래과학자거리(2,582세대), 2017년의 려명거리(4,804세대)와 비교해 보아도 현재 진행 중인 평양 살림집 거리 조성사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할 수 있다. 평양 이외 지역에서는 노동신문 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물량만 보아도 검덕지구 2년간 1만 세대, 련포온실농장 1천여 세대이며, 전국의 농촌 살림집 건설물량은 1~2만 세대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적게 잡아도 전국적으로 매년 3~4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살림집 건설의 공간범위와 공급대상 측면을 보면, 평양에서 지방의 도시와 농촌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과학자와 근로자 위주 주택공급에서 일반 근로자와 농민 등으로 살림집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이전부터 주요 지방도시에서 살림집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본격

1 최근 10년 간(2013~2022년) 서울의 아파트 건설실적(인허가 기준)이 연평균 39,415호(최근 10년 간 서울시 전체 주택건설 실적은 연평균 77,496호)이며(서울특별시 기본통계, 통계청 통계포털, 「북한 통계」의 '주요 도시 인구'에서 2020년 서울 인구는 9,616천명, 평양 인구는 3,084천명으로 서울 인구가 평양 인구의 3.12배이다.

추진한 양강도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 2019년에 완공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사업, 당초 홍수피해 복구사업을 2021년부터 확대 추진하는 함경남도 검덕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2022년 함경남도 함주군의 련포온실농장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2021년 12월 채택)에서 제시한 ‘농촌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 농업생산력 발전을 통한 자력갱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살림집 건설사업의 공간과 대상 확대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특색 있는 지역발전’의 원칙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국적인 살림집 건설사업 확대가 원활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지방 농촌지역의 사업추진에 다소 난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농촌 살림집 사업을 평가하면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평양시, 개성시, 남포시를 비롯한 여러 도의 많은 시들이 농촌 살림집 건설을 제기일에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노동신문, 2023/02/15).

살림집 건설사업의 의의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북한에서 살림집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 하에서 추진하는 ‘인민 물질문화적 수요 보장 건설’로서, 제1의 중심과업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건설의 두 전선’인 ‘산업건설’과 ‘인민수요 보장’ 중에서 현재로서는 후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살림집 건설사업은 ‘효과성’과 함께 ‘정책의지’, 원자재와 인력 공급 면에서 ‘실행가능성’도 큰 사업이다. 대북제재와 대외교역 감소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산업건설에 비해, 북한 자체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살림집 건설 부문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규모 살림집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사업의 의의’와 ‘정책의지’ 그리고 ‘실행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V. 나오며: 종합과 전망

2018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2013년에 천명한 ‘핵·경제 병진노선’이 승리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채택한다. 하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 대해 전략 기간이 마무리 된 2021년 초 북한은 스스로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의 정착을 성과로 평가한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대외교역의 급격한 감소로 산업건설이 어려운 조건에서, 살림집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 하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 과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2017년 평양의 려명거리 완공 이후 평양시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2020년 까지 중단되었지만, 그 기간에도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 등 대규모 도시·살림집 건설사업은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시작된 2021년부터는 평양의 대규모 살림집 거리 조성사업이 재개되었고, 2022년부터는 지방 주요 도시와 전국 시, 군들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살림집 건설의 규모 면에서 2017년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인구 당 건설호수 기준으로 평양에서는 서울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평양에서 지방 도시와 전국 시, 군으로, 공급대상은 핵심계층 위주에서 일반 근로자와 광업, 농업 종사자들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볼 때,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시멘트 연간 생산량 800만 톤도 거의 달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²

² Silberstein(2021)은 평소 600만톤/연에서 1/3 가량 증산하는 800만톤/연이 이를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관련 원자재를 자체 보유한 북한이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경제제재 하에서 시멘트의 질이나 더 넓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사업은 북한이 경제제재 하에서도 자력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영역이다.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산업건설보다 주택건설에서 성과를 내기가 더 쉽다. 산업시설에는 생산설비가 들어가는데 대북제재로 인해 설비 공급이 주택마감재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명분에 적합한 사업영역이며, 나아가 자급자족의 필수조건인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있다. 북한 경제발전계획의 목표와 원칙, 전략에 부합하고, 자력으로 성공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살림집 건설사업은 전반적으로는 지속 성장 또는 최소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이미 원자재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농촌 살림집 건설사업이 목표대로 수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대규모 살림집 건설공급을 통한 체제안정 효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력 향상, 그리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국경폐쇄 해제 이후 북중교역의 증가 등으로 북한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최소 조건은 마련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건설업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큰 편이지만, 산업시설과 인프라 건설에 비해 주택건설의 장기적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외교역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도시기반시설 공급과 병행해야만 하는데, 상하수도, 전력, 난방 등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북한이 영탄소, 영에너지 건축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기계설비 수입이 제한된 조건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성과와 효과를 가질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이념 지향’과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주택건설이 ‘효율성’과 주민 삶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향하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에 그것의 장기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참고문헌

김두환. 2023, “북한 도시생활시설 사업의 현황과 특징(2016년~2022년): 살림집 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 북한 건설·개발 동향」, 토지주택연구원.

이석기. 2022, 「202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2년 전망」, 산업연구원.

이석기. 2023, “2022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3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월호, KDI.

토지주택연구원. 2023, 「북한 건설·개발 동향(2023년 1분기)」.

토지주택연구원, 「북한 건설·개발 동향」 각 연도, 각 분기 보고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22.01.01,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Online Series.

Feron, Henri. 2017, “Pyongyang’s Construction Boom: Is North Korea Beating Sanctions?”, 38NORTH, [http://38north.org\(2023/04/24\)](http://38north.org(2023/04/24)).

Silberstein, Benjamin Katzeff. 2021, “Strategic Value, but Limited Prospects: North Korea’s Cement Industry”, 38NORTH, [http://38north.org\(2023/04/24\)](http://38north.org(2023/04/2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中 ‘주택건설 현황’.

통계청 통계포털, 「북한 통계」 中 ‘주요 도시 인구’.

노동신문. 2020.01.09,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3.01.07,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

노동신문. 2023.02.15, “시, 군들에서 올해의 농촌살림집건설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

데일리NK. 2022.01.20.,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준공검사 중...입사 대상자 순위도 정해져 - 평양 주민들 사이에 새 살림집 호평 자자...1호 행사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데일리NK. 2022.11.15, “화성지구 살림집 들어갈 대상은 누구? ... 북, 1차 배정안 포치”.

연합뉴스. 2023.02.27, “[한반도의 오늘] ‘새거리 착공’ 평양 서포지구 ... 北 수도의 관문”.

조선신보. 2023.03.03,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착공식 진행”.

통일뉴스. 2023.02.26, “김정은, 딸과 함께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 참석”.

SPN서울평양뉴스. 2023.04.17, “김정은,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하게 꾸려나갈 구상 다시 피력” ‘야간 준공식’ 진행, “황홀한 불야경을 펼친 화성지구의 새 거리” 선진”.

SPN서울평양뉴스. 2023.04.24, “평양 화성지구, 함남 검덕지구 살림집 본격 추진... 기초·골조공사 중(종합)”.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김 일 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I. 최악의 식량난 vs. 최대의 농업투자

2023년 2월초 북한의 식량난 관련 기사 연이어 보도됐다.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나 학계도 동요했다. 국내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해외 유력 저널이 국내 발 뉴스를 근거로 식량난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2월 연합뉴스가 식량난 보도를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았던 개성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명씩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 되었으며, 남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식량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¹ 이어서 글로벌 유력일간지 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3월 북한이 “수십년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를 이어갔다.²

그러나 보도나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연합뉴스가 제시하는 식량난의 근거는 “지난해 말 장마당을 배제한 채 곡물의 생산·유통을 직접 통제하는 ‘신양곡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식량 조달에 심각한 문제(정부 당국자)”가 발생했고, 이어서 WSJ이 제시하는 식량난의 원인은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원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식량난의 원인을 종합하면 신양곡정책의 영향에 따른 식량유통문제와 곡물생산량 감소가 식량난이 초래했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과 남한 정부 당국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 곡물가격이 상승했다.³ 또한 지난 2월 최

1 연합뉴스(2022.2.6). “北 개성에 하루 수십명씩 아사자…김정은, 두차례 간부 파견”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065400504>(검색일: 2023.4.24.)

2 THE WALL STREET JOURNAL(2023.3.2.) North Korea Suffers One of Its Worst Food Shortages in Decades, March 2, 2023.
<https://www.wsj.com/articles/north-korea-suffers-one-of-its-worst-food-crises-in-decades-ee25aa86>(검색일: 2023.4.24.)

3 www.dailynk.com

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는 농업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14.7%로 대폭 증액했다. 그리고 2022년말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끝난지 두달만에 농업부문을 의제로 2월말 7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에서는 정말 몇십년만에 최악의 식량난이 발생한 것일까.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일까. 몇가지 활용가능한 자료를 통해 식량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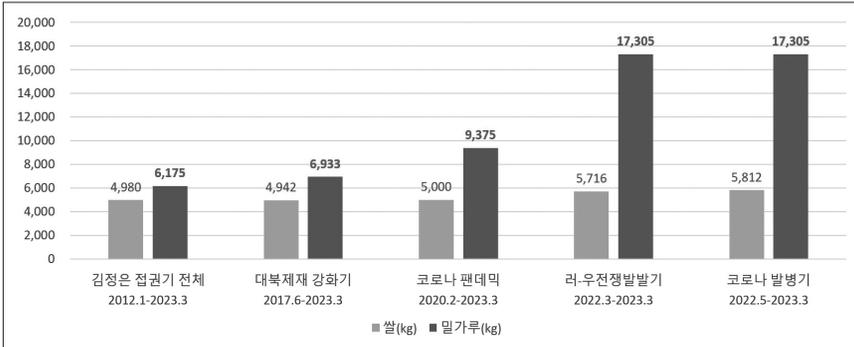
II. 북한 식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몇가지 Key-WORD:

증장기 통계과 제도 검토

1. Key-WORD 1: 시장 곡물가격 상승이 식량난의 원인?

최근 시장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식량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몇차례 중요한 계기별로 식량가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장 가격이 상품 수급에 가장 민감한 변수라는 점에서 5개 시기를 구분해 시장의 평균 쌀가격(1kg) 비교하면, ▲ 김정은 집권기 전체(2012.1-2023.3) 4,980원, ▲ 대북제재 강화기(2017.6-2023.3) 4,942원, ▲ 코로나 팬데믹(2020.2-2023.3) 5,000원, ▲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발발기(2022.3-2023.3) 5,716원, ▲ 북한 코로나 발병기(2022.5-2023.3) 5,812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현재까지 시장 쌀 가격은 5,000원(/1kg)으로 수렴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시기를 포함해도 평균가격(약 5,000원)의 경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러-우전쟁 발발과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1〉 계기별 시장 평균 쌀가격: 2012년 ~ 최근



* 자료: ▲ 쌀가격은 www.dailyNk.com, ▲ 밀가루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 동향. 각년도 분기별 평균가격, 단위: 1kg/북한원.

* 쌀가격은 2023년 3월말 기준, 밀가루가격은 2022년 4분기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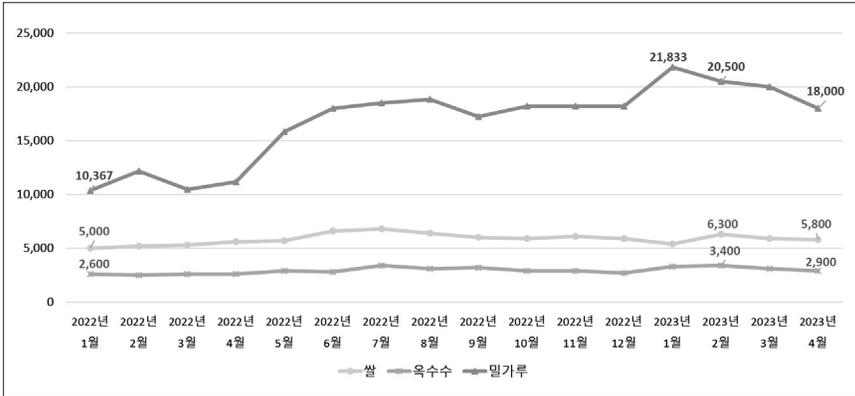
2022년 1월 이후 가격변동성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시장은 쌀과 옥수수보다 밀가루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쌀과 옥수수가 26%, 30% 상승한 반면, 밀가루는 97.7%가 상승했다. 특히 밀가루 가격은 동 기간 최고가격 대비 210%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북한 시장에서는 곡물 가격이 가장 높았던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쌀:밀가루=6,300:20,500(1kg, 북한원), 밀가루가 325%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대체재이자 기호식품재료인 밀가루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둘째, 북한 시장의 밀가루 가격은 국제시장가격과 정반대의 가격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곡물시장은 쌀(중립종):밀=1,705:258(1t, USD)로 밀가루에 비해 쌀이 311%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⁴

최근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이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만, 대체재인 밀가루는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만약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식량 상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www.krei.re.kr:18181(검색일 2023.3.15.)

황이 심각하다면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이 모두 유사한 수준의 가격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2〉 시장 쌀/옥수수/밀가루가격: 2022.1월-2023.4월



* 자료: dailyNk, 신의주, 평성, 청진 월말 평균가격, 단위: 1kg/북한원.

2. Key-WORD 2 : 2022년 쌀 수입량 증가하면 식량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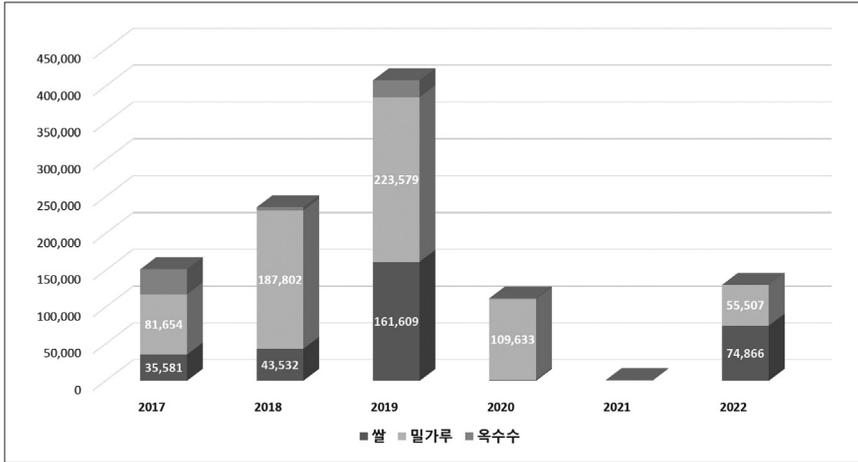
최근 쌀 수입량 증가현상이 북한의 비관적인 식량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분석들이 증가했다. 2022년 10월, 11월, 12월 각각 16,450톤, 30,172톤, 17,344톤의 쌀을 수입해 2022년 총 74,866톤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2017년 총 35,581톤, 2018년 43,532톤, 2019년 161,609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수입되었다.⁵

5 북한 식량외부도입량: FAO/WFP 각년도

(단위: 천톤)

	2012	2013	2014	2015	2016
외부도입량(UN Comtrade).	646	365	255	105	99

〈그림 3〉 최근 대중국 곡물수입량



* 자료: 중국해관통계, 단위: 톤

2022년 쌀 수입량이 2017, 2018년 대비 각각 110.4%, 71.9% 증가한 반면, 밀가루는 2017, 2018, 2020년 대비 각각 △47.1%, △238.3%, △97.5% 감소했다. 쌀, 밀가루, 옥수수의 열량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곡물수입량 전체를 2022년과 비교하면, 2017, 2018년 대비 각각 △21.71%, △84.6% 감소한 반면, 2020년 대비 식량수입량은 12.9% 소폭 증가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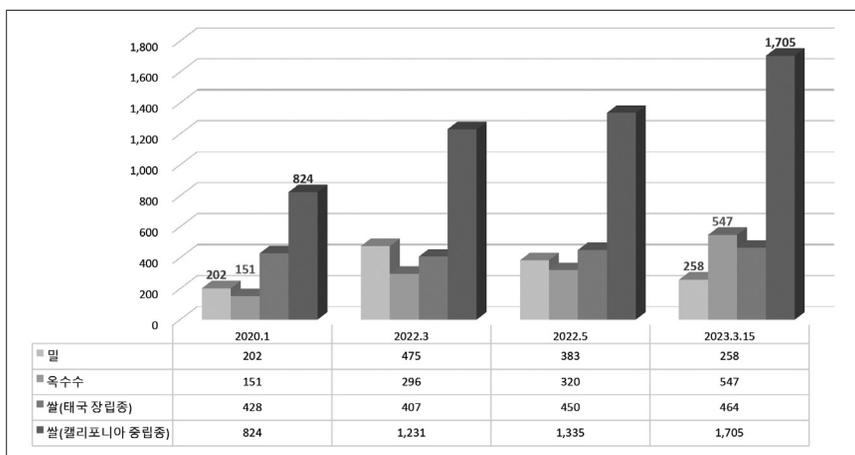
식량위기 기준을 곡물수입량 증가에서 찾는다면 414,000톤을 수입한 2019년이 최대의 위기이며, 수입량 감소에서 찾는다면 2021년이 최대의 식량난이 발생했어야 했다. 따라서 쌀 수입량 증가 현상을 식량위기로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한편, 2020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곡물가격과 비료가격이 모두 급등하면서, 북한의 비료와 식량 수입량

⁶ 2019년은 중국 시진핑주석의 방북에 따른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통계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곡물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했는데,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옥수수가 362%, 쌀(중립종)이 207%, 밀이 127% 상승했다. 쌀(중립종) 가격의 상승폭이 매우 큰데, 2022년 1월 대비 2023년 3월까지 무려 207% 급등했고, 현재까지 하락 경향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팬데믹 초기 “쌀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장립종)에서 기쁨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쌀 사재기와 공급 긴장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

〈그림 4〉 글로벌 곡물가격 동향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쌀: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단위: 달러/톤, F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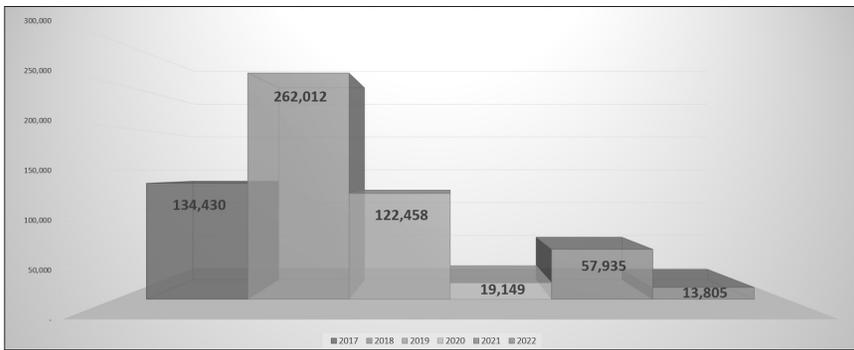
* 밀/옥수수: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단위: 달러/톤

7 “수출금지에 국제 쌀 가격 폭등... 식량안보 현실화되나,”Kita.net 종합무역뉴스, 2020-04-03 ; 장립종 시장의 가격상승이 중립종으로 이어졌고, 중립종 시장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3. Key-WORD 3 : 비료 수입량 감소하면 식량난?

비료수입량 역시 식량난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비료수입량이 감소한 원인은 ▲ 코로나 팬데믹과 국경봉쇄에 따른 무역규모 축소, ▲ 러-우전쟁이 국제비료 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그림 5〉 최근 대중국 비료수입량



* 자료: 중국해관통계, 단위: 톤

* 주: 수입비료의 성분은 질소비료(N) 85%, 복합비료(N,P,K) 15%

한편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화학비료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유기질복합비료 등 대체 비료의 생산량 증가도 비료수입량 감소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흥남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공정 신설 및 확장과 설비 보수를 17회 진행했다. 새로운 혼합비료 생산공정 건설(2015.5월), 흥남액비료공장 완공과 생산계획 초과 수행(2020.9월), 전년대비 비료생산계획 초과 수행(2022.9월) 등 지속적으로 질소비료 생산능력을 확대해 왔다.⁸ 남흥 역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4회 생산공정신

⁸ 북한에서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위상은 매우 높다. 지배인 출신 김철하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2022년 제8기 제6차전원회에서 화학공업상에 임명되었다.

설, 생산능력확장, 설비의 보수가 진행되었다. 대규모 탄산소다생산공정 준공(2022.8월), 시비년도 생산계획 초과 수행(2022.12월) 등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2021년 전국적으로 건설된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활용한 대체비료, 농장별로 생산하는 자급비료도 부족한 화학비료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소집된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도 비료공급의 정상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비료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있다.⁹

특히 화학비료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 질소비료와 인비료의 적기 보장, ▲ 그중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것은 인비료’이며 “린인비료전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보장”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 군, 농장 자체의 대용광물질비료 증산과 비료생산에 필요한 농류산(진한 황산) 공급체계 구축, 지효성알비료생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식량증산을 “지속적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는데서 린, 카리비료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야 하며, “동해에 있는 린회암을 채취해 린비료로 쓰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¹⁰

최근 로동신문은 순천린비료공장 준공 3년만에 인비료 생산소식을 보도했다. 그동안 “황린전기로용천연흑연전극의 질개선”¹¹ 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맡겨진 린비료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순천린비료공장

9 “영농물자와 자재를 군수물자와 같이 최우선적으로 보장할것이다.(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중에서), 『로동신문』, 2023년 3월 10일.

10 2020년 5월 준공한 순천린비료공장이 3년차를 맞아 생산정상화를 독려하는 조치이며, 인비료 원료를 활용한 지역 생산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11 “중요단위들에 파견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조들 역할 강화,” 『조선중앙통신』, 2023년 3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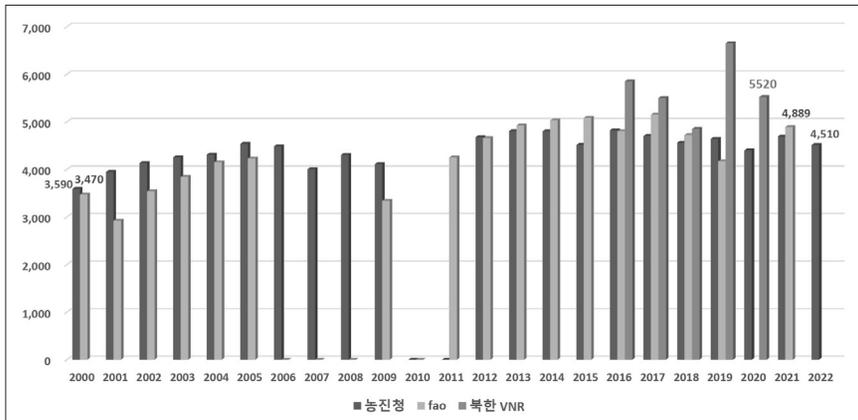
12 “정비보강추진지휘조 맹활약, 수십개의 대상공사 활력있게 추진,” 『로동신문』, 2023년 5월 7일.; 순천린비료공장 관련 논의는 김일한,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 전략 평가와 전망,”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히나우만재단 공동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21.11. 참조.

의 생산이 안정화된다면 식량증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Key-WORD 4 : 식량생산량 18만톤(3.8%, 농촌진흥청 추정치) 감소하면 식량난?

농촌진흥청, FAO, USDA 등 국내외 기관이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추정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장기data를 살펴보면, ▲ 농진청은 2000년 대비 2022년 식량생산량을 25%, ▲ FAO는 2000년 대비 2021년 생산량이 40% 늘어났다고 추정한다.¹³

〈그림 6〉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2000-2022년



* 자료: 농진청, FAO, 북한 VNR. 각년도. 단위: 천 톤.

식량증산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20년동안 북한 당국이 추진해온 식량증산 정책이 더디지만 일정한 성과를 내

13 한편, 북한 당국은 VNR(2021)을 통해 2016-2020년 5년간 최대 665만톤(2019년)에서 최소 550만톤(2017년)까지 식량생산량을 공개했는데, 국내외 기관과의 생산량 차이가 매우 크다.

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2014년 ‘5.30조치’에 따른 농장책임관리제, 농업발전 5대요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종자, 비료 등 농자재 보급능력 향상, 간석지개발 등 농업용지 확대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곡물생산량을 어떻게 평가할까. 부정기적이지만 북한 당국은 식량생산 성과를 평가해왔으며, 최근의 평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8차 당대회 농업부문 평가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개회사)했지만, “농업부문에서는 지속된 흑심한 가물과 큰물,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이는 성과”(제7기 사업총화)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농근맹 사회주의경쟁총화(2020),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2020), 최고인민회의(2017)를 통해 식량증산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VNR(2021)을 통해 2016-2020년 5년간 최대 665만톤(2019년)에서 최소 550만톤(2017년)까지 식량생산량을 공개했는데, 국내외 기관과의 생산량 차이가 매우 크다.¹⁴

〈표 1〉 북한의 곡물증산 공식 보도

	내용	출처
2021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 대단히 고무적”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 (2021.12.2)
2020	“(2020년) 올곡식생산계획을 넘쳐 수행”(농근맹중앙위원회)	올곡식과올과일생산목표 점령을 위한 2020년 사회주의경쟁총화(2020.9.27.)
2019	“(2019년)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대풍”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전원회의 (2020.1.1.)
2016	“(2016년) 알곡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 성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 (2017.4.21.)

14 The Government of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농촌진흥청, FAO, 북한 당국이 곡물생산량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통적으로 위성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여건에 따라 현장조사, 기상여건 등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 추정방법의 기술적인 차이, 현장의 정보부족 등에 따라 생산량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표 2〉 식량생산량 추정방법

	추정방법
농촌진흥청	▲ 기상 여건, ▲ 병충해 발생, ▲ 비료 수급 상황, ▲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 위성영상 등 종합 분석 결과(농촌진흥청 보도자료)
FAO	▲ 현장 샘플링조사, ▲ 기상 여건, ▲ 비료 수급 상황, ▲ 위성영상, ▲ 북한 농업성 자료 등 분석 결과(FAO 북한 보고서)
북한	▲ 위성정보해석기술, ▲ 농작물생육모의기술에 의한 논벼, 강냉이예상수확고판정, ▲ 평뜨기방법에 의한 포전별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 결합(〈허풍방지법〉, 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 채택)

최근 북한은 곡물생산량 측정을 강화하고 있다. 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에서 허풍을 방지하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 동 법은 ▲ 위성정보해석기술, ▲ 농작물생육모의기술, ▲ 평뜨기방법을 통해 포전별농작물예상수확고를 과학적으로 판정(허풍방지법, 16조)하고,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수단으로 모든 농업생산물을 정확히 계량(17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직접 감독통제(39조)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48조) 등 제재 조치를 법제화했다.¹⁵

FAO는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노하우와 장기 data를 확보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이다. 그러나 최근 FAO의 추정방법은 이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¹⁵ 〈허풍방지법〉, 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 채택

있다. 곡물생산량에서 ▲ 경사지(Sloping land, 폐기밭)와 개인텃밭(Household gardens) 제외하고, ▲ 수확후 손실(Post-harvest losses)분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

〈표 3〉 FAO 북한 식량생산량 추정치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경사지 생산량	203	203	n/a	n/a	n/a	n/a
텃밭 생산량	75	n/a	n/a	n/a	n/a	n/a
수확후 손실분	754	799	737	871	947	1,023
총 생산량	4,801	5,150	4,722	4,170	4,529	4,889

※ 자료: FAO. 각년도.

* 주: 2020년 생산량은 2019-2021년 평균값. * 단위: 천톤

경사지(폐기밭) 생산량이 2018년 이후 곡물생산량에서 제외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 당국의 조림사업(Government's reforestration programme)¹⁶에 따라 2017/2018년 양곡년도부터 55만ha의 경사지(Sloping land) 면적을 제외했다는 것이다.¹⁷ FAO가 2016/17년 양곡년도에는 경사도 15°이하 약 55만ha의 생산량을 약 20만톤으로 추정해왔다는 점에서 총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산림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지역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사지(개간산지) 면적 약 59만ha가 유지되고 있다.¹⁸ 더불어 북한 당국은 최근에도 경사도 20°이하 산림토지의 개간을 독려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¹⁶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ALERT. No. 340. 20 July 2017.

¹⁷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17/18. 9 July 2018.

¹⁸ 김경민 외, "위성영상과시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2020.

“평안남도과 함경남도가 새땅찾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는데, “경사도가 20° 아래인 산림토지를 개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개인텃밭(Household gardens) 생산량도 2015/2016년 이후 총 생산량에서 제외되었는데, 25만ha에 7만5천톤의 생산량을 특별한 설명없이 통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2014년 농장책임관리제 시행 이후 개인텃밭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장일을 “자기 집터밭을 가꾸는 심정”으로 가꾸면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수확후 손실분(Post-harvest losses) 추정량도 FAO data의 신뢰도를 의심케하는 변수다. FAO에 따르면 2014년 FAO/UNDP가 평양농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 쌀 15.6%, 옥수수 17%, 밀, 보리 등 기타 곡물은 16.35%가 수확후 손실분으로 추정했다. 도정률은 66%로 추정했다.²¹

그러나 2018년부터 손실분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전체생산량의 약 20%를 수확후 손실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7년 동안 농업 인프라가 더 악화되었다고 가정한 결과인 셈이다.²² 즉, 2014년 이후 영농기계화, 운반능력, 보관시설, 도정시설 등 농업인프라가 더 악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19 “새땅찾기와 간석지건설 힘있게 전개,” 『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15일.

20 “질 좋은 거름이 나간 것만큼 쌀이 들어온다,” 『로동신문』, 2022년 11월 14일. : FAO도 경사지와 개인텃밭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경사지는 개인, 집단, 또는 협동농장이 경작하고, 개인텃밭은 작아도 곡물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영양과 수입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 27 April 2016.

21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 27 April 2016.

22 FAO에 따르면 수확후 손실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 추수과정의 손실, ▲ 운반 및 탈곡과정의 손실, ▲ 포장 및 저장과정의 손실 등이다.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북한은 수확후 손실분(Post-harvest losses)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농장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식량증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 법은 “농업생산물의 수확, 운반, 탈곡, 가공,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허실, 부패변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72조 11항)할 것을 명문화했다. 한편, 2022년 하반기 군수부문이 생산해 황해남도에 지원한 농기계 5,500대는 수확후 손실분 감축을 위한 취해진 대표적인 정책이다.

〈표 4〉 <농장법>: 수확후 손실분 관리를 통한 식량증산 기대 효과

신 법(2021.11)	구 법(2015.6)
제7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 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1. 농업생산물의 수확, 운반, 탈곡, 가공,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허실,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제6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0. 농업생산물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허실하였거나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5. Key-WORD 5 : 북한 당국의 ‘신양곡정책’에 따른 식량난?

최근 시장의 곡물가격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 당국차원의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가 있다면 <량정법>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²³ 주요 개정내용은 수매대상과 우선순위 변경인데, 기관, 기업소의 부업지에서 생산한 양곡을 국가에 먼저 수매하고 나머지를 활용토록 개정한 것이다. 구법에는 부업지 생산량을 기관, 기업소가 자체 소비후 나머지를 국가 양정기관이 수매토록 해왔기 때문이다.

²³ <량정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8호(2021년 3월)에 따라 개정되었다.

기관, 기업소의 부업지, 원료기지, 실습지 등에서 생산되는 (국가)계획의 곡물생산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계획의 생산량을 국가가 우선 구매하고 여분을 기관, 기업소가 소비하도록 강제했다면 그만큼 시장에 유입되는 곡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부업지에서 생산한 곡물이 기관, 기업소의 운영자금 등 여유자금의 원천이었다는 점에서 생산자인 기관, 기업소와 소비자인 시장은 그만큼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표 5〉 〈량정법〉: 구매계획과 구매 우선순위 변경

신 법(2021.3)	구 법 (2015.2)
제14조 (량곡구매대상) 부업지, 원료기지, 실습지 같은데서 생산한 량곡은 국가계획에 따라 구매하게 된 량곡을 먼저 구매 한 다음 나머지 량곡으로 용도별계획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비하여야 한다.	제14조 (량곡구매대상) 부업지, 원료기지, 실습지 같은데서 생산한 량곡은 용도별 계획과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소비량을 내놓고 나머지를 량정기관에 구매시켜야 한다.

양정정책의 변화는 예견된 것이었는데, 2021년 3월 〈량정법〉을 개정한 이후 김덕훈 내각총리의 양정부문(량정사업소, 량곡판매소, 식량공급소 등) 현지료해는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2023년 2월까지 총 9차례 진행되었다.²⁴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시정연설(2021.9.30.),²⁵ ▲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회 서한(2022.2.9.)에서 ‘시, 군 량정사업소건설 및 현대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북한의 새로운 양정정책은 2022년 하반기에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 차원의 양정사업 강화는 가을 추수현장에서 시작되었다. 2022년 가을 농장의

24 북한 공식언론에 따르면 김덕훈의 2021년 7월이전 양정부문 현지료해가 없고, 시장 곡물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던 2023년 1~2월에 3차례 양정부문을 방문했다.

2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수확현장에서 발생하는 식량 유출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면서 농촌 지원에 동원된 주민들의 불만도 늘어났다. 대북 언론매체에 따르면 농촌지원에 동원되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은 해당 인민위원회(70%)와 협동농장(30%)이 부담해왔는데, 올해는 식량지원이 부실하다는 것이었다.²⁶

9월 중순 삼지연군의 한 농장에 동원된 노동자 4명이, 캐던 감자를 훔쳐서 산에 들어가 구워 먹다가 걸려서 4명 모두 3개월의 무보수 노동 처벌이 부과되는 사건이 있었다. 삼지연에 동원 다녀온 사람에게 들으니, '작년 농촌동원에서는 간식으로 감자를 삶아주기도 했는데, 올해는 농장이 아무것도 음식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마치 농촌 감옥인 것 같았다'라고 반발했다. 동원자의 불만이 강하다.

더불어 주목할 조치는 농촌에서 식량이 유출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했다는 데, 농촌 동원을 마친 사람들이 현장을 떠날 때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면서 불만이 증폭되었다.

감자 한 개라도 소지품 검사에서 발견되면, 그 10배를 동원자가 소속된 조직에 변상 시키는 엄격한 방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반출하려 한 자는 6개월 이상 무보수 노동을 부과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예년과는 달라진 추수현장의 식량유출 감독 강화현상은 보다 정확한 생산량 추정과 식량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소비품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자면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생산성을 높이며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량곡수매와 식량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26 “농촌동원 본격화... 당국은 수확물 유출 강력 경계,”asiapress. 2022년 9월 23일.

27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로동신문』, 2022년 9월 23일.

예년에 없던 추수과정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이면에는, 정확한 곡물식량 규모에 통계를 작성하고, 생산량에 따라 국가양정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국가 단위의 식량관리 규모가 파악될 경우, 대외여건과 기후변화 등 외부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때문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대북제재의 장기화를 상수(常數)로 놓고 보면,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식량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내는 게 국가의 성과를 보여줄 가장 좋은 방법’이며 ‘앞으로도 만성적인 수매 과정의 탈법’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²⁸

한편, 노동신문 2022년 9월 28일 사설은 추수과정의 국가적 지원과 함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면, “올해 농사는 당의 의도대로 빛나게 결속될 것”이라며 늘어난 식량생산량을 기대했다. 이유는 “▲ 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도 취해주고, ▲ 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었으며, ▲ 서해곡창 황해남도에서 새로 만든 수천대의 농기계를 공급하는 등 재정 및 물자 지원이 ‘원만하게 보장’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⁹ 그러나 당국의 기대를 만족시킬만큼의 식량생산이 이루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량증산 실패의 영향은 시장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검토할만한 원인을 몇가지를 추정하면, ▲ 2022년 5월 코로나 발생에 따른 지역간 이동통제 강화, ▲ 사재기, ▲ 상인들의 저항, ▲ 기관기업소의 식량 은닉, ▲ 국제식량가격 동조화 현상 등이다. 지역간 이동통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유통질서에 교란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부분적으로는 지역간 가격편차도 발생했다.³⁰ 사재기 가능성도 있는데, 2022년 저조한

28 “식량난 北, 양곡 유통비리 얼마나 심하길래…‘허풍금지법’ 등장,”『연합뉴스』, 2022년 9월 28일.

29 “사설. 올해 농사의 성과적결속을 위하여 총동원 앞으로!,”『로동신문』, 2022년 9월 28일.

작황에 따라 중국이나 외부 지원이 없으면 백미가 1만원까지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유포되었다.³¹ 양곡판매소에 대한 상인들의 저항도 추정할 수 있는데, 양곡판매소가 저렴한 가격에 식량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해진 물량이 소진된 후에는 오히려 시장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기관, 기업소의 식량 은닉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량정법>개정으로 부엽지, 실습지 등에서 생산된 식량을 국가에 우선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과의 가격차이를 고려해 은닉할 가능성도 있으며, 식량이 은닉될 경우 시장에서는 물량이 부족하고, 양곡판매소의 판매물량도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식량의 종류는 ▲ 농민들의 수확후 분배몫, ▲ 농장의 자체기금 조성몫의 시장 도매, ▲ 농장 간부나 군대 등 기관으로부터 부정으로 빼돌린 곡물, ▲ 수입산 유입,³³ 그리고 ▲ 기관기업소의 부엽지 생산 곡물 등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 국제가격 동조화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북한 시장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본격적으로 북중무역이 재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인 8,000원으로 즉시 복귀하는 현상을 보면 북한 시장의 대외경제에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정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혜를 보는 주민들이 등장했다. “(2022년) 지난해 하반기 시장에서 대체로 백미는 6,000원, 옥수수는 3,000원에 팔렸지만, 양곡판매소에서는 백미 4,200원, 옥수수 2,200원의 고정가격(약 70%)”으로

30 “3월 초 北 시장 곡물가 최근 5년 중 올해가 최고치,” DailyNK, 2023년 3월 8일.

31 “해 바뀌자 식량가격 급등, 이유는? 식량 불안 확산에 사재기 쇄도, 생활 파탄나 유량민까지 발생,” asiapress, 2023년 1월 8일.

32 “함경북도, ‘5호 창고’ 풀어 주요 기업소 노동자들에 식량 공급,” DailyNK, 2023년 3월 3일.

33 “김 정권이 식량정책 전환, 시장 판매 억제해 ‘식량 전매제’로 이행 강행 이시마루 지로,” asiapress, 2022년 12월 13일.

“월 1회, 1인당 5kg 정도를 세대 단위로 판매”³⁴하면서 노동자들이 수혜를 입었다.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식량을 공급받은 주요 생산기업소 노동자 가족들은 너무 반갑고 좋아 펄쩍 뛰었”다는 것이다.³⁵

바야흐로 국가(계획)가 시장과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현재까지는 북한 당국이 시장과의 경쟁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³⁶ 2022년 식량증산 실패의 영향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소집, 예산증액, 식량증산정책 재검토 등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Ⅲ. 북한의 식량증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전망

1. 국가정책 변화: 농업관련 제도 변화

최근 농업 법제가 다섯 가지 기초하에 제정 및 개정되었는데, ▲ 식량생산 주체인 농장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농업법〉, 〈농장법〉 개정), ▲ 곡물 수확후 손실분 절감을 위한 농장의 책임 강화(〈농장법〉 개정), ▲ 화학비료, 농기계 등 공급 강화(〈화학공업법〉〈기계공업법〉 제정), ▲ 생산된 곡물 및 통계 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강화(〈허풍방지법〉 제정), ▲ 곡물유통관리를 강화(〈량정법〉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더불어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인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제도화한 〈농촌발전법〉이 제정되었다.

2012년 ‘6.13조치’, 2014년 ‘5.30조치’ 등 식량증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농

34 “해 바뀌자 식량가격 급등, 이유는? 식량 불안 확산에 사재기 쇄도, 생활 파탄나 유랑민까지 발생,” asiapress, 2023년 1월 8일.

35 “함경북도, ‘5호 창고’ 풀어 주요 기업소 노동자들에 식량 공급,” DailyNK, 2023년 3월 3일.

36 김덕훈 내각총리는 2023년 2월초까지 양정부문을 현지지도하면서 정책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업관련 법률로 제도화되고 있는데, 최근의 법제 변화는 기존 정책의 법제화, 문 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10년동안 가장 두드러진 정책변화는 농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 다. ▲ 2012년 6.13시범조치(분배문제, 포전담당제), ▲ 2013년 농업개발구, ▲ 농장법 개정(2012-2022년, 9차례 개정), 북한 농업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 2019년 농업발전 5대요소가 체계화 되었다.

〈표 6〉 농업 법제 개정: 식량증산 정책 강화

❖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	식 량 증 산	❖ 농업법(2020 개정), 농장법(2022 개정)
❖ 수확후 손실분 절감 제도화		❖ 농장법(2022 개정)
❖ 농자재 공급 제도화		❖ 화학공업법/기계공업법(2021 개정)
❖ 곡물생산 및 통계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제도화		❖ 허풍방지법(2022제정),〈단위특수화본위주의반대법〉(2021제정)
❖ 곡물유통관리체계 강화 제도화		❖ 량정법(2021 개정), 수매법/사화급양법(2022 개정)
❖ 농촌 균형발전 제도화		❖ 농촌 발전법(2022 제정)

이와 더불어 농업 및 국토관리 인프라정책으로 ▲ 2020년 간석지개발 5개년 계획(2020-2024), ▲ 2021년 치산치수전망계획(2021-2030)이 제도화되었으 며, 2022년 북한식 국토균형발전정책인 ▲ 농촌발전 10개년계획(2022-2031) 과 〈농촌발전법〉이 제정되었다. 북한 농업정책의 핵심인 ‘농업발전 5대요소’는 2019년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농업부문 종합발전정책으로 수립되었는데, 기존의 개별적인 농업정책을 패키지로화한 것으로 ‘6.13조치’를 포함해서 기존의 농업 관련 정책을 망라한 식량증산정책이다. 최근의 농업부문 법제화도 농업발 전 5대요소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는데, 5대요소는 ▲ 영농과학기술, ▲ 농자재보 급, ▲ 농업인프라 개발 및 보호, ▲ 증산영농, ▲ 증산경쟁이다.

〈표 7〉 북한 농업-식량증산정책

5.30 조치	농장책임관리제	농업정책의 체계화	목표
① 기업부문: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② 농업부문: 농장책임관리제 ③ 대외부문: 경제개발구	① 경영 자율성 ② 분배 자율성 ③ 시장 친화성	▲ 2012년 613조치(농촌개척사업추진등농촌정책) ▲ 2013년 농업개발구 ▲ 2012-2022년 농장법(9차개정) ▲ 2019년 농업발전5대요소 ▲ 2020년 간석지개발5개년계획(2020-2024) ▲ 2021년 치산치수전망계획(2021-2030) ▲ 2022년 농촌발전10개년계획, 농촌발전법	식량 증산

2. 2023년 농업부문 예산 대폭 증액: 전년대비 14.7% 증액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농업부문의 식량증산을 위한 투자는 해마다 진행되었지만, 2023년에는 기록적인 예산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평가하듯이 식량증산을 가로막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 자연재해, ▲ 낮은 회복능력, ▲ 영농자재 부족, ▲ 낮은 기계화 수준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³⁷

제8기 제6차 전원회의(2022년 12월)는 2023년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제시하면서 식량증산과 농촌발전을 위해 ① 알곡, ⑥ 질소비료, ⑩ 수산물 ⑪ 살림집 등 4대 과제가 명시되었다.³⁸

더불어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농촌혁명강령”(농촌발전 10개

37 The Government of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38 12개 고지는 ① 알곡, ② 전력 ③ 석탄 ④ 압연강재 ⑤ 유색금속 ⑥ 질소비료 ⑦ 시멘트 ⑧ 통나무 ⑨ 천 ⑩ 수산물 ⑪ 살림집 ⑫ 철도화물 수송이다.

년계획)은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식량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농촌주민들의 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혁명강령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6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 농업(식량증산), ▲ 공업(지방경공업), ▲ 건설(살림집), ▲ 국토관리(치산치수), ▲ 교육, ▲ 보건분야이다.³⁹

〈표 8〉 김정은 시대 예산지출 계획 증가율(%)

	증 가 율	인민경제(투자)							인민시책(지출)				
		농업	수산	경공업	선행 부문	과학 기술	기본 건설	산림	교육	보건	사회 보장	체육	문학 예술
2012	10.1	9.4			12.1	10.9	12.2		9.2	8.9	7.0	6.9	6.8
2013	5.9	5.1			7.2	6.7	5.8		6.8	5.4	3.7	6.1	2.2
2014	6.5	5.1 (축산포함)			5.2	3.6	4.3		5.6	2.2	1.4	17.1	1.3
2015	5.5	4.2	6.8		5.1	5.0	8.7	9.6	6.3	4.1		6.9	6.2
2016	5.6	4.3	6.9		4.8	5.2	13.7	7.5	8.1	3.8		4.1	7.4
2017	5.4	4.4	6.8		4.5	8.5	2.6	7.2	9.1	13.3		6.3	4.6
2018	5.1	5.5				7.3	4.9		5.9	6.0		5.1	3.0
2019	5.3	5.7				8.7	6.6		5.5	5.8		4.5	4.1
2020	6.0	7.2				9.5			5.1	7.4		4.3	5.8
2021	1.1	0.9				1.6			3.5	2.5		1.6	2.7
2022	1.1	2.0*				0.7			2.6	0.7		0.8	
2023	1.0	14.7			1.0	0.7	0.3		0.7	0.4		0.1	0.3

* 자료: 최고인민회의 보고, 각년도.

* 주: 국방비는 연평균 15.9% 지출

* 2014년 체육: 평양청춘체육촌 개건 준공, 종목별경기장과 대규모 체육인 숙소 서산호텔 개건 등

* 2016년 건설: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 준공, 류경안과병원 등 15개 건축물 등

* 2017년 보건: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건설, 제약공업 현대화 등

* 2022년 ▲ 농업부문, ▲ 비상방역부문(전년대비 133.3%)의 예산지출항목 별도 편성

* 2023년 농업: 식량증산, 농촌건설 예산증액

39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 결정 ; 농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22년 협동농장의 국가 대부금 미상환 자금 전액을 면제하는 특혜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한편, 2023년 농업부문 예산 증액이 유일하거나 특별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한 계기에 부문별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체육부문, 2016년에는 기본건설부문, 2017년에는 보건부문에 예산을 집중 증액한 사례가 2023년에는 농업부문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2014년 ‘5.30조치’와 함께 농장책임제 1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 10년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결과 기존의 농업발전 5대요소별 당면과제들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데, ▲ 비료, 박막 등 영농자재 공급능력 확대, ▲ 관개체계 등 인프라 개선, ▲ 종자개량 등 과학기술발전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제8기 제7전원회의에서 “농업생산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해 “현단계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요하는 당면과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발전의 전망을 확고히 열어놓는데서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⁴⁰ 즉, ‘농업을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실히 올려세우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표 9〉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의 식량증산정책 후속조치

분야	정책
내각 정책	-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전망목표 실행을 조직사업 추진 - (관개체계 보강) 현존 관개시설 정비보강, 관개면적 확대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최우선 보장 조치 - (영농물자 보장) 비료생산 활성화로 농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료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공급하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문제 토의 - (영농기계화) 기계공업부문 등 새로운 농기계 생산 및 농기계부문 개진 실제적인 방안 제기

4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3월 2일.

분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전국가적 사업으로 전환시켜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간석지 농사에 필요한 종자와 로력, 기술수단들을 갖추는 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기 위한 방책 수립중
영농 자재 공급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 계획된 질소비료와 린안비료(인비료)의 적기 보장 - 동해안 린회암의 린비료 원료 사용 추진 - 지역별 자체 대용광물질비료 생산 - 대용비료생산용 농류산 운반용조차량 보장 - 국가단위 지효성비료생산공정 조성 - 카리(칼륨)비료 연구 독려 - (영농박막) 전국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박막생산기지 건설 - (농약) 현대적인 농약생산공장 건설 - (농기계) 농기계생산 및 수리 부속품 공급 강화, 모내는기계, 소형벼수확기, 밀, 보리파종기 생산공급, 트랙도르(트랙터)부속품 등 - 농기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락원기계종합기업소, 금성트랙도르공장 등 트랙도르 등 올해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된 성능높은 여러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 농기계생산에서 의미있는 전진 - 부속품, 관개용뿔프, 희천정밀기계공장, 안주뿔프공장, 트랙도르부속품, 관개용뿔프생산량 확대 - 영농부품,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량책베아링공장 등 영농부속품과 자재생산에서 혁신 - (에너지) 농사용 기름 보장, 전력, 농촌에 필요한 전력 우선 전력공급 - 전력우선공급,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많은 전력이 생산되고있으며 이것은 농촌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장 - 전력손실방지, 배전선로 등 농촌에 공급되는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 - 농기계부문 전력공급, 농기계생산기지 등 공장, 기업소들에 전력을 원만히 보내주기 위해 각 도송배전부와 여러 시, 군의 송배전소, 자기 지역의 트랙도르부속품공장과 농기계작업소 등 전력수요 장악과 정상 공급 대책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관개체계 정비보강 - 올해 계획된 관개공사 추진, 5개년계획기간 관개체계 완비 대책 - 관개공사대상 설계와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의 설비, 자재보장사업 연계 - 각 도별 단계별계획으로 관개구조물 복구, 원비사업 본격화 - 지역 배수갑문, 배수문 상태 점검 및 정비보수와 새로 증설하며 물길바닥파기, 배수로치기를 비롯한 물길확장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 - (새땅찾기 농경지복구) 토지정리사업과 간석지내부망공사 등 알곡생산면적 확대 실무 조치

분야	정책
	- (지력개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기질, 대용광물질비료 생산확대로 토양 비옥도 향상 주력
영농 과학 과학 기술 연구 개발	- (종자개발) 우량종자 개발 강화 - (칼륨비료개발) 카리(칼륨)비료문제해결 연구 - (채소증산 기술개발) 새로운 원통형 남새(채소)재배장치와 지능형통합생산체계 개발구축 - (농업부문 과학연구단위 첨단기지화) 2025년 결속 - 2023년 혁명사적교양실, 비연구소, 농업정보화연구소, 과학기술발전전망연구소, 본원청사 등 농업연구원본원지구의 10여개 대상건설 추진 - 비료와 농약의 효과성 강화, 과학적인 재배기술확립, 토양개량기술개발 등 연구과제 수행 촉진
축산업 수산업	- (축산) 육아용 젖제품(유제품)과 다시마, 과일 등 영양식품 정상공급 - (수산) 고기배, 어구 현대화, 어로활동/양어/양식 추진

* 자료: 로동신문, 2023년 1~3월 보도

3. 북한 농업 전망: 잠재력과 위협요인

최근 농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수단을 손질하는 조치가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정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누적된 농업부문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위협요인으로 ▲ 3년째 정체상태인 국가재정능력, ▲ 장기화 국면의 대북제재, ▲ 무역규모 축소와 만성화된 수지 역시 식량증산정책의 목 달미를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⁴¹ ▲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북한이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위협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에 북한 당국은 식량자급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41 북한의 주목할만한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은 김일한, “만성화된 식량위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 지속인가 개선인가,”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022.12. 참조.

없어 보인다. 북한 농업정책의 성공가능성 역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력으로는 ▲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서 식량증산정책, ▲ 비료, 농기계등 영농자재공급 향상, ▲ 관개체계 개선 등 국토관리 능력 향상, ▲ 밀농사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능력, ▲ 유제품, 채소 생산능력 등 영양소 다변화 가능성 등은 북한 농업이 보유한 무시못할 잠재력이다. 특히 쌀, 옥수수 중심의 식생활에서 밀제품, 유아용 유제품, 채소 생산 및 공급능력이 향상되면서 식량 다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식량증산의 절대 요소인 비료(특히 인 비료)공급능력과 다수확 종자개발 및 공급에서 성과가 나타날 경우 북한 농업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침점’을 맞을지도 모른다.

〈표 10〉 식량증산의 잠재력과 위협요인

Potential	goal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국가 최우선과제 유지 • 제8차 당대회이후 정책 우선순위 유지 •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식량증산투자 확대 	<p>식 량 증 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3년연속 국가재정능력 정체 • 예산지출 증가를 둔화, 투자재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 비료/농기계 공급체계 개선 • 질소비료 증산, 린비료 생산, 칼륨비료공장 건설 • 농기계의 군수부문 민수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 금속/화학부문 중간재 조달 미흡 • 화학비료 생산역량 축소 • 농기계등 금속공업발전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개선) 국토관리사업, 관개농업체계구축 • 농업관개시설 2~3년내 완비 • 국토관리, 치산치수, 새땅찾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축소) 무역수지 악화 • 식량/비료 수입 축소 • 기초식재료, 가공품 소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대응) 알곡생산구조 변화 • 종자개발, 밀농사 확대, 옥수수농사 축소 • 영농과학기술 투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역량한계 • 태풍 발생빈도 증가, 연중 태풍 발생 • 인프라 개선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다변화) 축산/수산 생산량 확대 • 유제품 생산, 공급확대, 수산물 생산 증대 • 대규모 남새농장 건설 등 우곡의존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 곡물가격 상승, 수입능력 약화

참고문헌

- 김경민 외, “위성영상과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2020.
- 김일한, “만성화된 식량위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 지속인가 개선인가,”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세미나 발제문, 2022.12.
- 김일한,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 전략 평가와 전망,”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공동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21.11.
-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ALERT. No. 340. 20 July 2017.
-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17/18. 9 July 2018.
-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Outlook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 27 April 2016.
-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Outlook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 27 April 2016.
-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 The Government of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 www.asiapress.com
- www.dailynk.com
- www.wsj.com
- Kita.net 종합무역뉴스, 2020-04-0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www.krei.re.kr:18181
- 중국해관통계
- 『로동신문』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 북한연구 시리즈

1. 북한평론 박재규 저 1975
2. 북한외교론 고병철 외 공저 1977
3. 북한무역론 공산권경제연구실 편 1979
4. The Politics of North Korea Jae Kyu Park et., eds. 1979
5. 북한군사정책론 박웅서 외 공저 1983
6. 북한정치론 박재규 저 1984
7.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 편 1986
8.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Jae Kyu Park et al., eds. 1987
9.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고현욱 외 공저 1987
10. 북한의 법과 법이론 최종고 외 공저 1988
11.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정상훈 외 공저 1990
12.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양재인 외 공저 1990
13.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김일평 외 공저 1991
14.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건설 고병철 외 공저 1992
15.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최청호 외 공저 1993
16.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황의각 외 공저 1995
17.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Jae Kyu Park ed. 1999
18. 인터넷과 북한 연구소 외 공편 2000
19.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함택영 외 공저 2000
20.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서대숙 외 공저 2002
21.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4
22.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Byung Chul Koh ed. 2005
23.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6
24. 북한의 노동 양문수 외 공저 2007
25.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7

26.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8.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윤대규 편 2008
29.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윤대규 편 2008
30. *The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Phillip H. Park ed. 2009
31.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윤대규 편 2010
32.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윤대규 편 2009
33.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4.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5.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이수훈 편 2011
36.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이수훈 편 2011
37. 동북아 법적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 이수훈 편 2012
38.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이수훈 편 2012
39. *Nuclear North Korea: Regional Dynamics, Failed Policies,
and Ideas for Ending a Global Stalemate* Su Hoon Lee ed. 2012
40.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편 2012
41.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수훈 편 2014
42.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윤대규 편 2015
43.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연구소 편 2015
44.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윤대규 편 2016
45.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윤대규 편 2016
46.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7.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8. *Rebuilding North Korea's Economy: Politics and Policy* Phillip H. Park 2016
49.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 임을출 저 2016
50. 북핵, 오늘과 내일 연구소 편 2016
51. *North Korean Tourism: Plans, Propaganda, People, Peace*
Dean J. Ouellette 2017
52.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신석호 외 공저 2018
53.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이관세 저 2019
54.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북대북한연구회 편 2019

- 55.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이관세 저 2020
- 56.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소 편 2020
- 57.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박서화 저 2021
- 58.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 연구소 편 2021
- 59.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박서화 저 2021
- 60.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임을출 저 2021
- 61.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최영준 저 2022
- 62. 북한 사회주의심리학의 이해 이형중 저 2022
- 63.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이병철 저 2023
- 64. 신진연구자가 본 김정은은 체제 강혜석 외 공저 2023

■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 1.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박재규 편 1974
- 2. 「테크네트로닉」 시대의 국제정치 Z. Brzezinski 저 / 박재규 역 1974
- 3. *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 From Confrontation to Accommodation*
Jae Kyu Park et al., eds. 1975
- 4.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박재규 편 1979
- 5.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ae Kyu Park ed. 1979
- 6. 80년대의 미소관계 L. Caldwell et al. / 소련연구실 역 1981
- 7. 판례중심 국제법 김정건 편 1982
- 8. *U.S.-Korean Relations, 1882-1982* Tae-Hwan Kwak et al., eds. 1982
- 9.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Jae Kyu Park et al., eds. 1983
- 10. *Korea and Indonesia in the Year 2000* Jae Kyu Park et al., eds. 1984
- 11. SDI와 아시아의 안보 박재규 외 공저 1987
- 12.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Jae Kyu Park et al., eds. 1987
- 13. 한국과 미국 1: 정치·안보관계 안병준 편 1988
- 14. 한국과 미국 2: 경제관계 김덕중 편 1988
- 15. 한국과 미국 3: 사회·문화관계 임희섭 편 1988
- 16. 한-미관계의 재조명 김덕중 외 공편 1988
- 17. *Alliance Under Tensi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U.S. Relations*
Manwoo Lee et al. 1988

18.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Ronald D. MacLaurin et al. 1989
19.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쿠친스키 외 공편 1990
20.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 Korean-American Dialogue*
Manwoo Lee ed. 1993
21. *The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nwoo Lee et al., eds. 1993
22. *Culture & Development in a New Era and in a Transforming World*
Manwoo Lee et al., eds. 1994
23. 위기의 세계와 한국
연구소 편 1994
24. *The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Tae-Hwan Kwak et al., eds. 1996
25.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
Tae-Hwan Kwak ed. 1997
26.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Tae-Hwan Kwak et al., eds. 1997
27.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서대숙 편 2001
28.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이수훈 편 2009
29. 핵의 국제정치
이수훈 편 2012
30. Northeast Asia's Nuclear Challenges
Su Hoon Lee ed. 2013
31. 동북아 新권력체제와 한반도 정책
이수훈 편 2013
32. *South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Lakhvinder Singh ed. 2014
33.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연구소 편 2015
34.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연구소 편 2016
35. 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6. 미중 전략적 경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7. 북중관계: 1945-2020
이상만 외 저 2021
38.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길윤형, 김용민, 조진구 저 2022

■ 통일연구 시리즈

1.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Tae-Hwan Kwak et al., eds. 1983
2.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ae-Hwan Kwak et al., eds. 1984
3.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김한교 외 공저 1986
4.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구영록 외 공저 1986

5.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양성철 편 1989
6.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외 공저 1991
7.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함택영 외 공저 1992
8.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연구소 편 1996
9.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연구소 편 1996
10. *The Four Powers and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Tae-Hwan Kwak ed. 1997
11.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곽태환 외 공저 1997
12.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곽태환 외 공저 1997
13.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Byung Chul Koh ed. 2002
1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연구소 편 2004
15.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Yong-Sup Han 2005
16.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North Korea Modernization Research Group ed. 2010
17.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이수훈 외 공편 2012
18. 민주화·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이수훈 외 공편 2014
19.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16
20.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연구소 편 2016
21. 분단 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연구소 편 2016
22.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21

■ 한국연구 시리즈

1.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김호진 외 공저 1989
2.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Dae-Kyu Yoon 1990
3.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손호철 외 공저 1991
4. 인민당연구 심지연 저 1991
5. 한국정치·사회의 새 흐름 연구소 편 1993
6.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Dae-Kyu Yoon 2010

■ 지역연구 시리즈

1. 연방주의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무한한 다양성
Valerie Earle ed. / 박재규 역 1974
2. 미국외교행정의 진로: 미국외교정책기구심사위원회보고서 박재규 외 공역 1976
3. 비교공산주의정치론 염홍철 편역 1977
4. 전환기의 동남아시아: 지역정치 및 국제관계 박재규 편 1977
5. *Southeast Asia in Transition: Regional & International Politics*
Jae Kyu Park et al., eds. 1977
6. 인도네시아 동남아지역연구실 저 1983
7. 동남아정치론 강태훈 외 공저 1983
8. 중공의 개혁정치: 구조·과정·정책 중·소 연구실 편 1985
9. 현대 일본의 정치 한배호 외 공저 1986
10. 현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안택원 편저 1986
11.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김국진 외 공저 1987
12. *Koreans in North America: New Perspective*
Seong Hyong Lee et al., eds. 1988
13.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정광하 저 1989
14.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Tae-Hwan Kwak et al., eds. 1991
15. 소련 이은순 외 공편 1991
16.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한석태 외 공저 1991
17.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연구소 편 1996
18. 독립국가연합(CIS)의 이해 이영형 저 1999

■ 제3세계연구 시리즈

1.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염홍철 외 공저 1987
2. *State-Building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Su-Hoon Lee 1988
3.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이수훈 외 공저 1989
4.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이수훈 외 공저 1989
5.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이수훈 외 공저 1991
6.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김세균 외 공저 1992

■ 번역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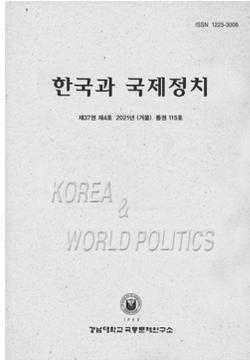
- | | | |
|---------------------|----------------------|------|
| 1.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개정판) | 페리 앤더슨 저 / 함택영 외 공역 | 1994 |
| 2. 농민혁명 | 제프리 페이지 저 / 강문구 외 공역 | 1995 |
| 3. 동원에서 혁명으로 | 찰스 탈리 저 / 양길현 외 공역 | 1995 |
| 4. 제국의 신화 | 잭 스나이더 저 / 함택영 외 공역 | 1996 |

■ 자료집 시리즈

- | | | |
|----------------------------------|-----|------|
| 1.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선 | | 1991 |
| 2. 지방미군정 자료집 | | 1993 |
| 3. 김일성 연구자료집 | | 2001 |
| 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 | 2004 |
| 5.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연구현황 자료집 I | | 2006 |
| 6.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 조진구 | 2020 |
| 7.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문서 번역과 과제 - | 조진구 | 2021 |

■ 한반도포커스 시리즈

- | | | |
|------------------------------------|----------|------|
| 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 박영준 외 공저 | 2023 |
| 2.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 비전통안보 해부 | 김상규 외 공저 | 2023 |
| 3.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 전재성 외 공저 | 2023 |
| 4. 중국의 영역별 리스크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 루신지 외 공저 | 2023 |



한국과 국제정치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정세 및 통일전략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완보문제 전문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ISSN : 1225-3006 (Print) / ISSN : 2713-7570 (Online)

연락처 :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T. 02-3700-0708 / alimseo@kyungnam.ac.kr

제39권 제1호 2023년(봄) 통권 120호

Vol. 39, No. 1, 2023 (Spring)

1.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의미와 특징: 정전협정, 평화협정, 지역 평화프로세스와의 비교
김학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조교수)
2.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핵체제를 넘어: 불안전 주권성의 전개와 극복
전재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3.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도경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4. 한반도 정전체제와 냉전문화
김귀옥(한성대학교 소양 핵심교양학부 교수)
5. 냉전의 변용과 정전체제의 지속: 통일과 공존의 갈등 구조
이종원(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6. 동상이몽: 한국전쟁 시기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 -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선즈화(화동사범대학 교수)
7. 한국전쟁의 본질과 성격: 세계대전(I)
박명림(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Asian Perspective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학술지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주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5년에는 해외 선진 학문의 국내 수입과 국내 연구의 해외전파를 위해 미국의 포틀랜드주립대와 공동출판협정을 맺었고, 1998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 사회 과학 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등재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으며,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Asian Perspective applies an Asian lens to world and comparative politics. With its vital contemporary focus, it probes the regional,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issues that affect Asia today. Asian Perspective is peer-reviewed and publishes quarterly. It is produced with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Now in its fourth decade, the journal welcom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is committed to promoting a lively exchange of ideas between scholars and policymakers.

FORTHCOMING ISSUE

Vol. 47, No. 1 WINTER 2023

Special Issue 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 Part 1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Strategies for Building, Dominating, and Managing Networks Hyun Ji Rim

Institutional Dilemma: Quad and ASEAN in the Indo–Pacific Kei Koga

China’s Rising Space Power and the CCP’s Survival in the Indo–Pacific Era Fumiko Sasaki

Bilateral Alliances in an Interconnected Cyber World:
Cyber Deterrence and Operational Control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James E. Platte

From Conceptual Idea to Strategic Reality:
“Indo–Pacific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Scholars Li Li and Tianjiao Jiang

Vietnam

A Two–level Game Approach to Hanoi’s Foreign Policy Proactivism Vu Thi Thu Ngan and Le Dinh Tinh

China

The Yin and Yang of China’s Power:
How the Force of Chinese Hard Power Limits the Quest and Effect of Its Soft Power Shree Jain and Sukalpa Chakrabarti

회원가입안내

●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본 연구소로 우송 또는 제출하여 주시고, 회비를 납부하심으로써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ifes.kyungnam.ac.kr>)

● 회비 및 재가입

1. 1년회비

학생회원 : 30,000원

일반회원 : 50,000원

기관회원 : 100,000원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기관평생회원 : 3,000,000원

* 해외회원은 우송료 15,000원 별도 청구

2. 납부방법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온라인 : 경남은행 / 570-07-0011980, “경남대학교”

3. 재가입 :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 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움 등 연구 행사에 초청이 됩니다.

2.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 『한국과 국제정치』와 『현대북한연구』 등의 간행물이 제공됩니다.

* 해외회원에게는 『Asian Perspective』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면 영문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독하셔야 합니다.

3.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출판도서 구입 시 30%의 할인혜택 (평생회원에게는 무료기증)

● 문의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전화 : 3700-0725, 팩스 : 3700-0722, E-mail : pedia@kyungnam.ac.k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신청서

* 신청일 20 년 월 일

분 류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학생회원 <input type="checkbox"/>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개인평생회원 <input type="checkbox"/> 기관평생회원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자택주소	□□□□□	전화:() -	
		휴대폰 :	
		E-mail :	
직장(학교) 주소 및 직위	□□□□□ 직위 :	전화:() -	
우편물발송	<input type="checkbox"/> 직장(학교) <input type="checkbox"/> 자택		
학력사항	대학교 과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 대학교 과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학위 (연도)		
전공 및 관심 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경력			
가입권유인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 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_____ (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반도 포커스

FOCUS ON KOREAN PENINSULA

2023-05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

- 이영훈 동국대 DMZ평화센터장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과 경제법 정비 동향

- 최은주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

-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 김두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FAX. 02.3700.0707

E-MAIL. ifes@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

비매품/무료



9 788984 215665 93300
ISBN 978-89-8421-566-5

본 문서에는
무료 서체인 KoPub 폰트와 G마켓 산스 폰트가 사용되었습니다.